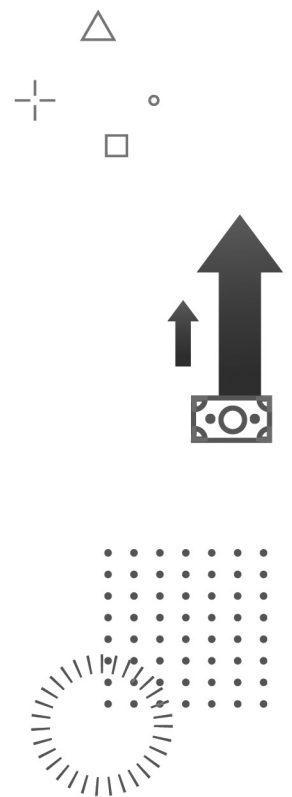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사회적 경제

2020년 7월 20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입법추진단

주관 |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후원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 사회적경제활성화 전국네트워크 ·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 한겨레신문사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13:00 ~ 13:30	30'	참석자 등록	
13:30 ~ 13:55	25'	참석자 소개	
		개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 / 국회의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입법추진단장 / 국회의원 ▶ 정원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 서울 성동구청장
13:55 ~ 14:00	5'	기념촬영	
		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의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 경기 수원시장 ▶ 김현대 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 사장
14:00 ~ 14:25	25'	주제발표1	문재인 정부 사회적 경제: 정책 평가와 제도개선 필요성 ▶ 김재구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사회적경제전문위원회 위원장
14:25 ~ 14:50	25'	주제발표2	한국판 뉴딜과 사회적 경제: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14:50 ~ 15:15	25'	주제발표3	‘포스트 코로나 시대’ 포용사회로 도약을 위한 지방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 /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부회장
15:15 ~ 16:30	75'	패널토론	성공적인 한국판 뉴딜을 위한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입법과제 ▶ 좌장 : 송경용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 ▶ 패널 - 김혜원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 하재찬 한국 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 - 변형석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장 - 장지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경영기획실장
16:30		폐회	

목 차

□ 개회사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 / 국회의원 1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입법추진단장 / 국회의원 5
- 정원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 서울 성동구청장 9

□ 축사

- 박병석 국회의장 13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15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의원 17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19
- 홍남기 경제부총리 23
- 김현대 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 사장 27

□ 주제발표1 문재인 정부 사회적 경제: 정책 평가와 제도개선 필요성 31

김재구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사회적경제전문위원회 위원장

□ 주제발표2 한국판 뉴딜과 사회적 경제: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 53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 주제발표3 ‘포스트 코로나 시대’ 포용사회로 도약을 위한 지방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 75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 /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부회장

□ 패널토론 성공적인 한국판 뉴딜을 위한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입법과제

- 김혜원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85
- 하재찬 한국 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 91
- 변형석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99
-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05
-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장 113
- 장지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경영기획실장 119

개 회 사



김 정 호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사회적 경제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 김정호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주시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고통스러운 팬데믹에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성공적인 K-방역은 다른 국가들에 모범 사례가 됐습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은 코로나로 인한 사회 혼란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디지털 기반의 강점을 활용한 ‘한국판 뉴딜’로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며 더 큰 변화와 도약을 준비 중입니다.

이 같은 변화의 움직임 속에서 한국판 뉴딜과 연계해 위기를 극복할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으로서 ‘사회적 경제’가 주목받는 것도 그리 놀랍지 않습니다. 이미 사회적 경제는 ‘함께 잘 살기 위한’ 가치로 1930년대 세계 대공황,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등 위기를 굳건히 버티며 성장·발전해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감염병으로 인해 비대면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요즘 모든 사회와 경제적 활동은 삶의 터전 근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공동체 중심의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것이 핵심인 사회적 경제는 시민들의 삶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과도한 산업화가 가져온 기후·환경 위기가 인류생존 마저 위협하는 가운데, 자본 중심의 경제가 아닌 사람 중심의 경제를 지향하는 사회적 경제는 국민들의 안정적인 삶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가 기후변화에 잘 대처하고 경제위기의 대안으로 적극 활용된다면 한국판 뉴딜의 성과는 두터워질 것이며, 사회적 경제는 더욱 꽃 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전환의 시기에 사회적 경제가 가진 잠재력을 실현해 우리 사회 변화의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국회와 당, 정부는 물론 사회적 경제 종사자와 시민 등 국민의 협조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회의 근본적인 경제활동 원리로 더 튼튼하게 성장하고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책과 제도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사회적 경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련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 모시고 더 나은 발전의 길을 모색하고자 하며, 토론회 끝까지 좋은 의견 많이 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사회적 경제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을 모든 분들의 값진 시도들이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경제를 중심으로 한 당정·창·현장조직의 징검다리가 되어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 발판을 다지는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입법 활동과 제도적 뒷받침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 회 사



김 영 배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입법추진단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사회적 경제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서울 성북갑 국회의원 김영배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사회적 경제」 정책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김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당원 여러분,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정원오 회장님과 지방정부 단체장, 실무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사를 후원해주신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적경제활성화 전국네트워크,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한겨레신문사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를 이겨내고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뤄내야 할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14일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 규정하며, 포스트 코로나의 해법으로 한국판 뉴딜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한국판 뉴딜의 성과가 지역 곳곳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민관이 어떤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는지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연대와 협력, 공동체의 가치를 우선하는 사회적 경제가 한국판 뉴딜 성공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라 믿습니다.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의 접근을 통해서 한국판 뉴딜은 더욱 지역에 잘 뿌리내리고, 시민들은 정책의 적극적인 참여자이자 선도자로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행사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입법추진단에는 서른 명의 국회의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176석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1/6을 차지하는 대규모 모임입니다. 그만큼 한국판 뉴딜과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입법추진단에서는 우선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입법과제를 완성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를 통한 한국판 뉴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난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사회적경제 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사회적 경제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사회적 경제 3법을 이번 정기국회 때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또한 전국위원회인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당과 정부, 민간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가 지역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축하해주신 박병석 국회의장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님과 김태년 원내대표님, 윤호중 사무총장님, 홍남기 경제부총리님,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님과 김현대 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깊이 있는 논의를 이끌어주신 김재구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사회적경제 전문위원장님,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님, 김수영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부회장님, 송경용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님, 김혜원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님,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님, 변형석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님,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장님, 장지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경영기획실장님께도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촛불혁명에 이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의 대전환! 시민의 힘, 공동체의 힘,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 지름길을 사회적 경제가 열어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개 회 사



정 원 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 서울 성동구청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사회적 경제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 성동구청장 정원오입니다.

저희 협의회는 사회적 경제가 성장하여 우리 사회의 대안으로 자리잡도록 여러 단위들과 함께 노력해왔습니다. 21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점에 국회의원, 단체장, 민간 전문가와 사회적 경제 주체분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19가 초래한 전례없는 위기는 우리 삶 곳곳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위기의 시대에 사회적 경제는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상생과 나눔, 호혜와 협력이라는 원리를 통해 시민의 삶을 제자리로 돌리고 보호하는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적 경제도 IMF 국난과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제도화되고 정책에 본격적으로 편입됐습니다. 특히 2010년 이후로는 중앙정부의 노력과 함께 지방정부가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혁신적인 정책들을 펼쳤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많은 내용이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가 작지 않지만, 아직 우리 사회를 견인해갈 만큼의 힘과 영향력은 조금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적 경제가 코로나 이후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를 보다 넓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시민의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원리로, 지방정부가 혁신적으로 일하는 방식으로 적용하고 도입해야 합니다. 그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대전환의 과정에 사회적 경제가 기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경제의 제도기반이 보다 튼튼하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저희 협의회가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관련 법과 제도의 제정을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던 것도, 지방정부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관련 입법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현장의 많은 바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내지 못했던 입법노력의 결실을 맺는 시작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사회적 경제

뜻깊은 이번 행사를 저희와 함께 주최, 주관하는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의 김정호 위원장님과 입법추진단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토론회를 후원해주신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적경제활성화 전국네트워크,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한겨레신문사에게도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적 경제의 발전을 위한 국회와 지방정부, 민간의 노력을 응원해주시고자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토론회에 축하와 격려를 보내주신 박병석 국회의장님, 이 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님, 홍남기 경제부총리님,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님, 김현대 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님께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사회적 경제가 딛고 있는 현실과 앞으로 가야할 길을 제시해주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님, 김재구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사회적경제 전문위원회 위원장님, 저와 함께 지역 현장에서 ‘모두가 행복한 경제’를 일구고 계신 협의회 부회장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님과 협의회 단체장 여러분, 그리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를 제안해주신 여러 전문가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토론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합니다.

이번 토론회가 우리 사회적 경제가 가진 잠재력을 실현하고 한국사회의 대전환을 사회적 경제가 견인하는 길의 첫 번째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더 많은 분들이 한 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국회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사회적 경제 현장과 시민들이 중지를 모으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사회적 경제’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축 사



박 병 석

국회의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사회적 경제

축 사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박병석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사회적 경제 정책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토론회를 주최·주관하신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 김정호 의원님과 입법추진단장 김영배 의원님,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장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에게도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코로나19로 우리는 경제위기뿐 아니라 일상생활마저 근본적인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로 대표되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선언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목받는 것이 ‘사회적 경제’입니다.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 상생과 나눔의 경제를 추구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도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등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고용 불안정, 빈부격차 심화, 지역격차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퀘백의 ‘태양의 서커스’, 연매출 15조로 스페인 GDP의 10% 가량을 담당하는 몬드라곤협동조합, 세계적인 축구클럽 FC바르셀로나가 바로 대표적인 사회적 경제 모델입니다.

‘사회적 경제’를 ‘한국판 뉴딜’과 연계해 대전환의 시대를 준비한다는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는 뜻깊습니다. 지방정부 단체장과 사회적 경제 전문가들이 논의하신 내용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국회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이 해 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사회적 경제

축 사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해찬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사회적 경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준비를 위해 노력해주신 김영배 의원님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후원해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코로나 위기가 반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순식간에 감염위기의 공포에 휩싸였고, 사회적 관계와 경제적 교류마저 단절돼 전 인류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며 경기침체보다 더 심각한 격차사회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대전환이 절실합니다.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그 담대한 첫걸음입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큰 축으로 삼아 대한민국에 사회적 경제의 기틀을 세우고,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전환시켜 낼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사회를 자본·경쟁·독점과 같은 무한 경쟁 체제에서 인간·협동·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지속가능한 체제로 바뀌어나가겠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사회적 경제의 안착과 한국판 뉴딜의 성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20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

이 해 찬.

축 사



김 태 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사회적 경제**

축 사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사회적 경제’ 정책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를 위해 고생해주신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입법추진단 의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시아 최빈국이던 대한민국은 70여 년 만에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러나 빠른 성장 과정에서 불평등과 양극화, 환경파괴와 같은 어두운 그늘도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사회적 문제로 인해 발생한 취약계층은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앞에서 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코로나19는 공동체적 가치와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만 행복한 사회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에 이윤보다 사회적 가치를 먼저 생각하는 사회적 경제의 역할이 커지길 기대합니다.

그 동안 민주당과 정부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했고, 지자체와 함께 전국적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과 지원에 나섰습니다. 우리 당은 당내에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만들어 사회적 경제에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마련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약이었던 사회적 경제 3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3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계류하다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사회적 가치 기본법> 제정으로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정립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책 마련도 살피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견을 경청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축사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사회적 경제

축 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경기 구리시 출신 윤호중 국회의원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사회적 경제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는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입법추진단이 출범하고 처음으로 여는 토론회입니다. 더욱 뜻깊은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전심전력으로 이끌어주신 김정호 의원님, 입법추진단 결성부터 오늘 토론회 준비까지 애써주신 김영배 의원님과 모든 참여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간 당의 사회적경제위원회 출범과 전국위원회로의 격상,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에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반영 등 나름대로 사회적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어왔습니다만,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다했나 자문해보면 부끄러운 마음이 큼니다.

20대 국회에서 제가 대표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비롯해 사회적 경제 3법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였으나 임기만료폐기로 결국 무산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21대 국회 들어 다시 법안을 발의하였고 정부도 사회적 경제 3법의 연내 통과를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입법추진단 의원님들과 함께 이번에는 기필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팬데믹 속에서 우리는 대내외적으로 큰 위기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경제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사회 양극화는 심화되는 등 눈앞의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협동과 연대를 기반으로 하고, 이미 대한민국 경제의 한 부분으로 어엿하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사회적 경제의 역할은 필수적입니다. 지속가능한 한국형 뉴딜을 추진해나가는 데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경제 방식은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사회적 경제

모쪼록 이번 토론회를 통해 문재인정부 사회적 경제 정책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 성공적인 한국형 뉴딜을 위해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활용하고 연계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고견을 경청하여 입법 및 제도화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홍 남 기

경제부총리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사회적 경제**

축 사

코로나 19로 인해 전 세계가 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그간 사회적 경제를 통해 ‘함께 잘 사는 길’을 모색해 온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최근 세계경제는 코로나 19에 따른 각국의 강도 높은 봉쇄조치 과정에서 대공황 이후 전례 없는 경기침체와 일자리 충격에 직면해있습니다. 더욱이 초유의 감염병 사태는 경제·사회구조 전반의 대대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수요가 급증하면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지속가능 경제에 대한 갈증은 그린 경제로의 신속한 이행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병에 따른 지금의 위기는 그 피해가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에게 집중(uneven)되면서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불평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당면한 미증유의 위기를 맞아 실직 위기에 처한 근로자, 생계가 절박한 취약계층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이 버티고 일어서며 나아가 코로나 19 이후의 시대(Post-Covid 19)를 선도해나가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주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의 선언으로서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였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대한민국을 탈바꿈시킬 새로운 100년의 설계(Grand Vision)입니다.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의 토대 위에 한국이 나아갈 방향과 미래 먹거리로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의 두 축을 세우고 2025년까지 160조원의 대규모 투자를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전환의 길에 막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대항해의 성패는 가계·기업, 중앙·지방정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층위의 경제·사회 주체들의 참여(collective impact)에 달려있습니다. 정부의 뉴딜 투자는 지금의 위기를 해결할 마중물에 불과합니다. 결국 민간의 투자로 확산되고 디지털·그린 마인드가 각 개인에게 체화되어 새로운 일상(new normal)이 될 때 새로운 100년의 길은 열릴 것입니다.

저는 사회적 경제가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 한 축을 당당히 담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공동체 속 문제의 장(場)에 기꺼이 참여하여 연대와 협력을 통해 포용사회를 이끌어 온 저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19 극복과정에서 지난 3월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사람을 줄이는 손쉬운 길 대신 ‘고용조정 제로(0)’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사회적 경제

선언한 바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공감씨즈’는 대구 의료진에게 숙소를 무상으로 제공했고, 소셜벤처 ‘그로잉맘’은 휴원·휴교에 따른 육아부담을 함께 나누며, 상생을 통한 위기 극복에 앞장선 바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2+1」 영역에서도 이미 사회적 경제계가 의미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소셜벤처가 중심이 되어 노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외국에 나갈 기회가 적은 소외계층을 위해 VR 기반 외국어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디지털 포용시대를 여는데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린 뉴딜 분야에서도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자립형 에너지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 도전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말 저는 국내 최초 에너지제로 주택단지이자 입주민 스스로 주택시설과 주거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노원구 이지하우스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그린 뉴딜을 통한 저탄소 사회 실현에 사회적경제계가 기여하는 방법과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끝으로 안전망 강화 분야에서 사회적 경제는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과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등 고용·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는데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와 경험이 쌓여 앞으로 한국판 뉴딜의 본격 추진과정에서도 사회적 경제계가 폭넓게 참여해 지역사회의 디지털·그린 전환을 선도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도 가능한 한 힘을 보태겠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2017년 10월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시작으로 사회적 금융, 소셜벤처, 인재양성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경제가 한 단계 성장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모델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자금·판로를 확충하고 규제를 합리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혁신적 사회적경제기업, 지역의 포용성장을 선도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초유의 글로벌 위기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상생하는 새로운 길을 찾는 과정에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의 지혜와 혜안이 길잡이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20일
경제부총리 **홍 남 기**

축사



김 현대

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 사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사회적 경제

축 사

안녕하십니까.

한겨레신문 대표이사 발행인 김현대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경제를 시장과 정부 영역, 그 둘만으로 가르는 양분법적인 대한민국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중간지대는 없다는 엄격한 흑백 구분에 틀에 갇혀 지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회적 경제라는 새로운 가치는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새로운 상상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10년 사이 사회적 경제는 우리의 삶 속으로 빠르게 스며들었습니다. 어느덧 우리 사회의 중요한 정책의제로 부상했습니다. 포용성장, 공정경제 분야에서는 정부의 핵심정책 기조와 사회적 경제가 연계되기 시작했고, 그 외 다양한 사회·경제 정책 분야에서도 사회적 경제 개념이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참여와 책임을 근간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99%의 세상을 향한 물질적인 기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오신 많은 분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의 성취입니다.

하지만 좌우 정치 이념을 넘어 ‘사람’을 위한, 실사구시의 경제 대안을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의 법적인 토대를 만드는 작업은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사회적경제 기본법, 사회적가치기본법(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 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3대 입법과제들은 번번이 정쟁에 휩쓸려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시원한 타개의 장면을 지켜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만큼,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입법추진단에 거는 기대 또한 남다릅니다. 진정성 있는 대화로 지혜로운 협치의 결실을 꼭 맺으시길 바랍니다.

사회적 경제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경제를 조직해 운영하는 실천 활동입니다. 신뢰와 협동의 힘으로 자조적인 경제를 만들어 나간다는, 고유의 가치와 정체성을 더욱더 치열하게 가다듬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들이 차별받지 않고 공적 지원을 누릴 수 있도록, 공정한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당연히 누리는 공적 혜택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배제되는 우리 주위의 비정상은 제거돼야 마땅할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사회적 경제

대한민국은 숱한 위기를 겪으면서 눈부신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삶의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다는 점 또한 아프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가 축적될수록 불행의 국민 총합이 커지는 양극화의 길로 지금도 치닫고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을 추진해 19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 청사진의 키워드는 ‘저탄소 경제’, ‘포용 사회’로의 전환입니다. 사회적 경제의 오랜 열망과 같은 곳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은, 그 무엇에 앞서 격차를 좁히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사회적 경제〉 포럼을 위해 애써주신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입법추진단과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후원으로 이번 포럼을 더욱 빛내주신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적경제활성화 전국네트워크,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에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한겨레신문사도 여기에 마음을 보탭니다.

오늘 토론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전환의 청사진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회적 경제가 양극화를 넘어서는 실사구시의 발전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한겨레신문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을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사회적 경제

주제발표 |

문재인 정부 사회적 경제:
정책 평가와 제도개선 필요성

김재구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사회적경제전문위원회 위원장

문재인 정부 사회적 경제 : 정책 평가와 제도개선 필요성

2020. 7. 20.

김재구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사회적경제전문위원장)

주제발표자 소개



김재구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학사, 석사, 박사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스탠포드대학교 초빙연구원
- 대통령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한국생산성학회 회장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
-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사회적경제전문위원장 (現)
- 한국경영학회 부회장 (現)
- Social Enterprise World Forum 이사 (現)
- 명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2002 - 現)

팬데믹과 새로운 문명의 전환



BRUEGEL THE ELDER, PIETER
Bruegel (Netherlands) (?), 1525 - Brussels, 1569
The Triumph of Death
1562 - 1563. Oil on panel.

COVID-19 이후 글로벌 인식변화

COVID-19 이후 글로벌 인식 변화

글로벌 공동체 자각 ↑ (이타주의, 포용, 연대)

글로벌 체인 붕괴 + 언택트 서비스 증가 + 기후위기 인식 확대

- 코로나의 확산과 나라별로 상이한 치명율을 보이며 더 이상 서구의 발전 방식이 정답이 아님을 깨달음
- 경험하지 못했던 위기 대처 방식을 우리 안에서, 우리 사회 안에서,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 찾고 만들어야 한다는 의식 확산

사람(Human)중심/사회혁신/사회적가치기반 혁신에 대한 주목

Collective Impact



정부/공공기관

- 사회적 가치 시스템 구축
- 사회적 가치 경영성과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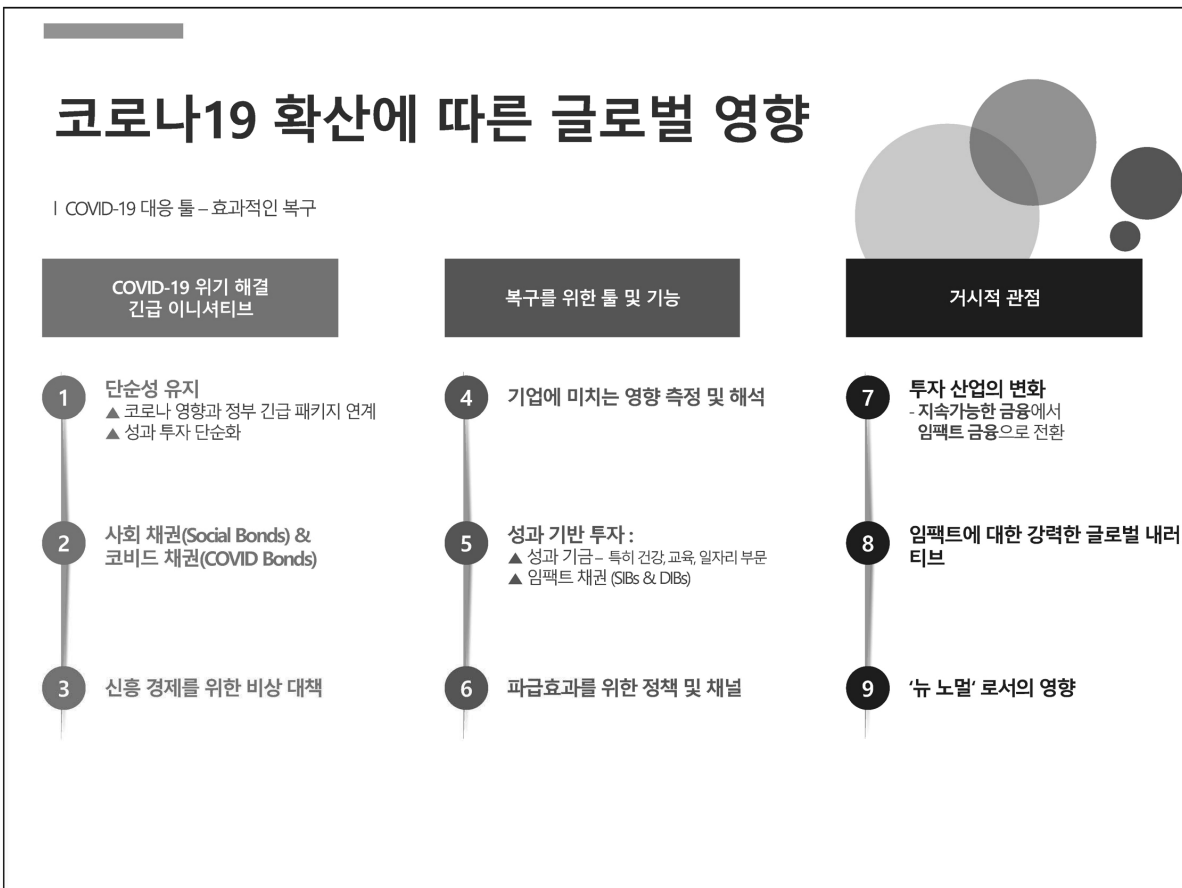
민간기업

- 사회가치경영(Social Value - based Manag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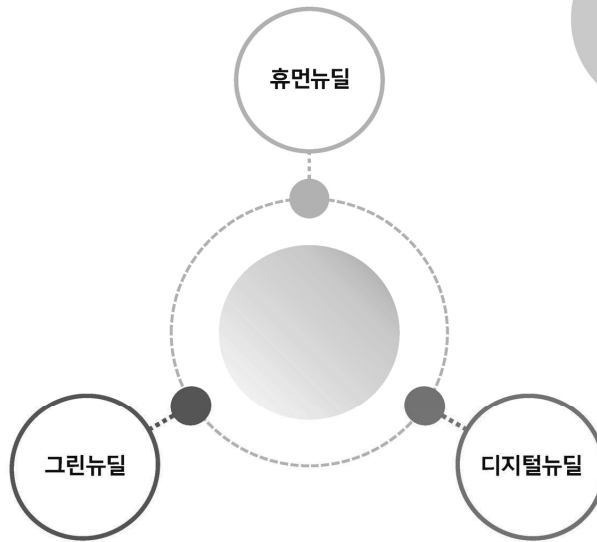


시민사회

- SE, SV 협동조합, NPO를 통한 사회적 가치 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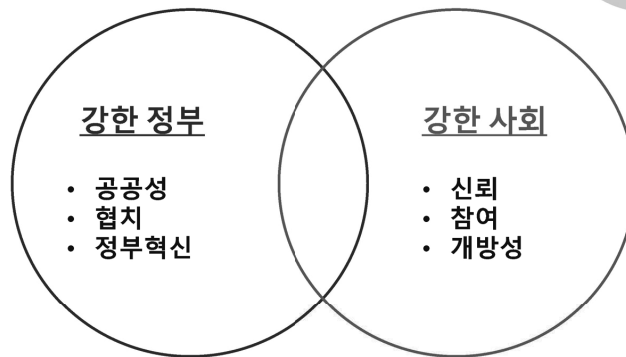


COVID-19 이후 전환적 뉴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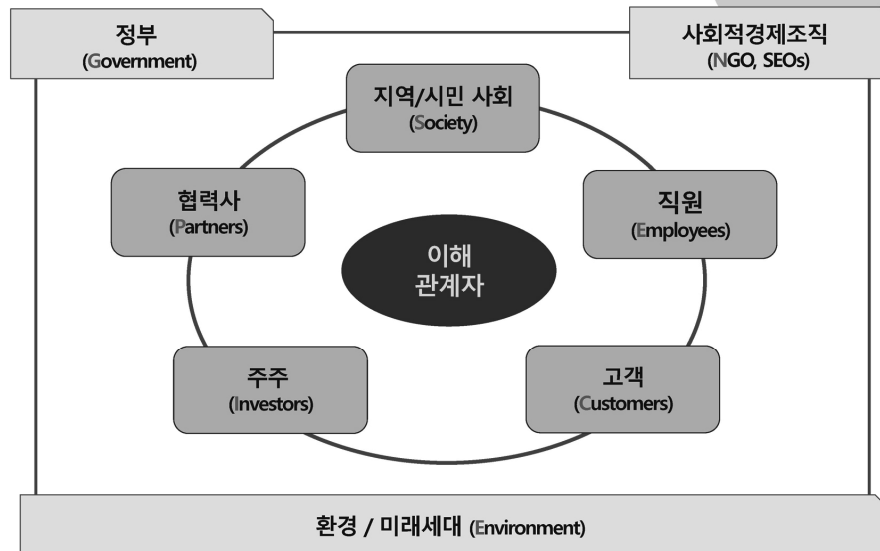
[출처] 사회가치경영의 실천전략, 김재구, 배종태 외 4인, 2020. 6. 출간

정부와 사회의 협력



[출처] 사회가치경영의 실천전략, 김재구, 배종태 외 4인, 2020. 6. 출간

확장된 이해관계자 모형 (SPICE-GEN 모형)



[출처] 사회가치경영의 실천전략, 김재구, 배종태 외 4인, 2020. 6. 출간

사회적 경제 정책 평가

사회적 경제의 의의

사회적 경제

국가와 시장 사이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활동



중요성

포용·협력성장의 핵심으로 시장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책으로 부각

- ▶ 사람중심의 경제
- ▶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寶庫)
 - * 산출액 10억원당 취업유발계수('14): 全산업 12.9명, 협동조합 38.2명
- ▶ 공동체 회복과 지역활성화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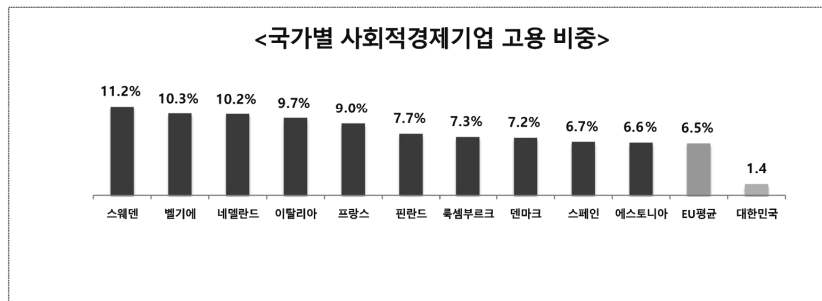
사회적 경제의 필요성

EU의 경우, 사회적 경제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

- ▶ GDP 10%, 전체 고용의 6.5%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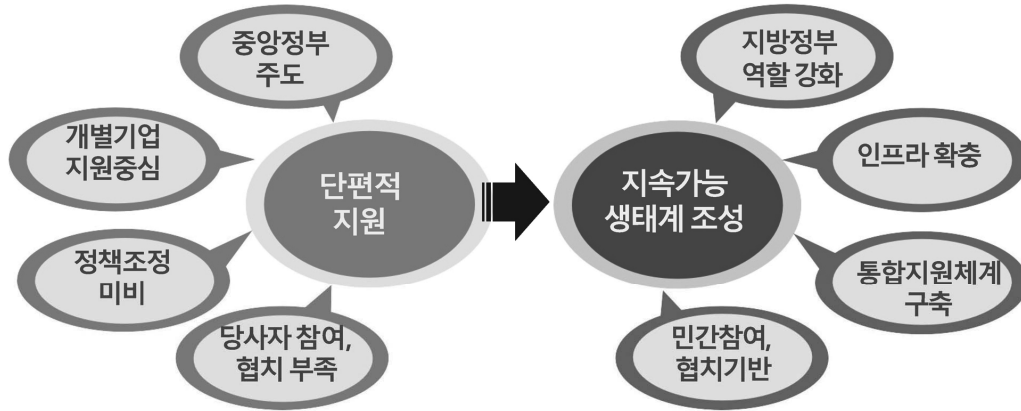
우리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수준

- ▶ 사회적경제기업 4만여개, 37만명 고용(2015)



사회적 경제 정책 방향

나아갈 길



사회적 경제 정책방향

대응방향

Two Track 전략 추진

- ▶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금융, 판로, 인력)
- ▶ 유망분야 진출확대를 통한 신속한 확산

(소셜벤처, 신재생에너지, 도시재생, 사회서비스, 문화예술, 프랜차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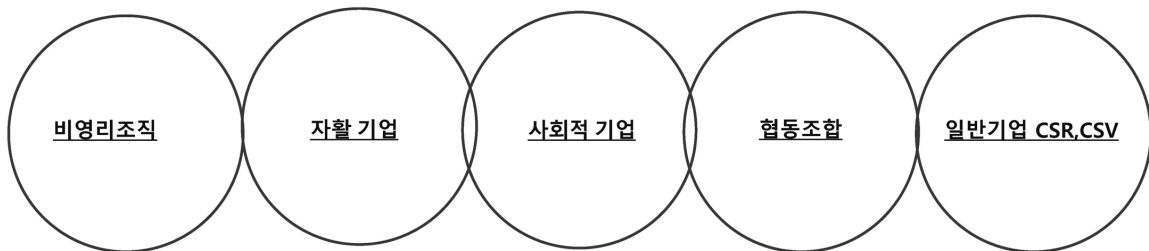
신속 추진을 위한 단계적 대응과 실적

- ▶ 정부차원의 최초 대책으로 시급한 실행과제 추진 ('17년 3차 일자리위원회 대책보고)
- ▶ 사회적 경제조직 확대와 스케일업 및 경쟁력 제고, 금융, 인력양성,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
- ▶ 지자체 전담조직 확충 및 관련조례 증가, 지역자원연계 공동체 활성화, 생활밀착분야 진출
- ▶ 발달장애인 자조모임(복지부), 사회주택(국토부), 사회적농업(농식품부), 교육(인사처)

한국에 기업가 정신이 필요한 이유

- 밥그릇에만 집착하는 기득권자들. 자기들의 위치를 지킬 수 있는 규제 양산
- NH, 혁신 거부
- 위험을 감수하는 도전적인 투자보다는 안정적이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에 투자
- 단기 성과주의, 부서간/부처간 분파주의 Silo Effect

사회적 경제의 확산



- 자립, 자조 + 지속가능성 + 지역기반
- 시민사회의 발전, 민간역량 강화
- 기업가 정신 + 지배구조

사회적 경제 정책 평가

사회적경제비서관직 신설

- ▶ 대통령 아젠다로서 국정과제 우선순위
- ▶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민관협치와 부처간 조정
- ▶ '20부터는 민관협의체, 부처별 TF 설치 및 주기적 회의를 통해 이행점검 강화

사회적 가치 기반 국정운영 천명, 성과평가 즉각 실시

- ▶ 공공기관의 경우 경영평가 지표 중 50%를 사회적가치 지표로 구성
-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 수립, 실행
-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가치 실현 추진 지원계획 수립, 실행

사회적 금융 / 임팩트투자를 통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노력

- ▶ 영국의 BSC등 도매기금을 벤치마킹하여 사회가치연대기금 설치
- ▶ 사회적경제조직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증거를 만들어 주류금융 참여 확대 노력

MS·블랙록도 콕 찍었다...월가 달구는 'ESG펀드 투자 열풍'

글로벌 운용·연기금 앞다퉀 ESG 펀드 투자

블랙록 "올해 테마는 기후변화
화석연료 관련 기업 투자 제외"
MS "10년 내 탄소배출 0" 선언

#1.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4일 연례서한에서 환경(E)·사회(S)·지배구조(G) 요인을
자산운용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화석연료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의 25%를 넘는 기업들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ESG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지금의 두 배인 150개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블랙록은 약 7조달러(약 8110조원)에 달하는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글로벌 임팩트 투자 현황

개인, 패밀리오피스, 재단



일반 PE, 자산운용사, 금융기관



임팩트 투자 전문 PE, V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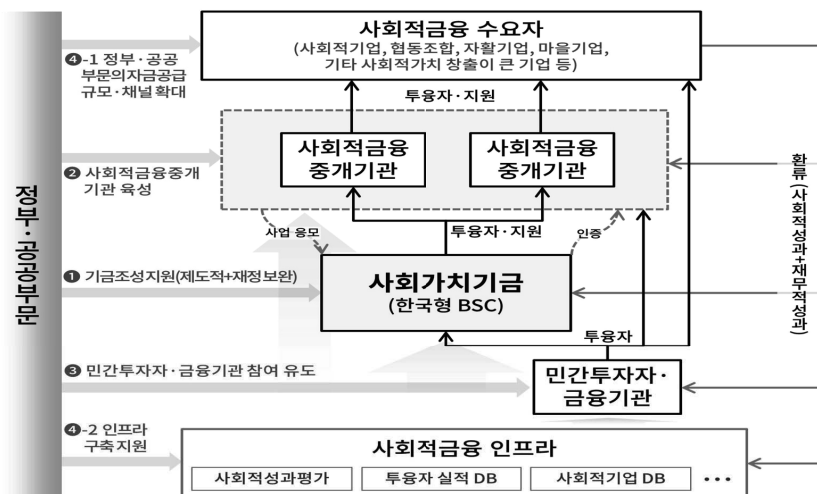
Source: Sizing the Impact Investing Market(GIIN), Global Family Office Report 2019(UBS)

- **임팩트 투자: 재무적 수익과 함께 사회에 대한 생산적 가치 창출을 의식적으로 추구하는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
- 금융위기 이후 개인, 패밀리오피스, 재단에서 주도적으로 적용 → **USD 502 Billion**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 중 PE/VC 투자 규모는 약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됨
- 대형 금융기관들이 고객들에게 다양한 임팩트 펀드를 제공 + **글로벌 PE 및 자산운용사들도 대형 임팩트 펀드를 조성하며 시장을 선도**
- 전세계 패밀리 오피스의 1/4이 임팩트 투자에 자산을 배분하고 있으며, 이 중 81%는 일반 투자자산 대비 유사하거나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함
- 일반 & 임팩트 투자사 간 공동 투자를 통해 **임팩트 유니콘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가속화 되는 추세임**
- 다만 여전히 2030년까지 UN SDGs 17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USD 2.5 Trillion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자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민간 자금(Private LP)의 증가가 수반돼야 함**

19

임팩트투자 시장

한국정부는 사회적 금융 구축 방안에서 한국형 BSC인 사회가치기금 조성 지원과 함께 GSG 가입을 지원하여 선진사례 도입 및 자문의 창구로 삼았음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민간 주도로 설립된 최초의 사회적금융 도매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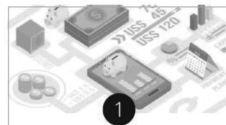
- 2017.10** ●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 (관계부처 합동)
 사회적경제 부문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수립한 최초의 대책
- 2018.02** ●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발표 (관계부처 합동)
 사회적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한 추진 대책
- 2018.02** ● 사회가치연대기금 설립 추진단 구성
 기금 설립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 사회적경제협의체, 사회적금융 관련기관, 금융 전문가 등 약 20여명이 참여하는 '사회가치연대기금 설립 추진단' 구성
- 2018.06** ● 사회가치연대기금 설립 준비위원회 구성·운영
- 2018.12.27** ●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설립 인가 (기획재정부)
- 2019.01.23** ●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출범 (이사장 송경용)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가치 추구 활동의 내실화 · 규모화 · 지역화

목 표 사회적경제의 발전과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금융 생태계 조성

- 중점분야**
- 1 기술 혁신의 민주적 활용
 - 2 시민자산화 방식의 사회적부동산 활성화 (도시재생 · 사회주택)
 - 3 환경의 지속 가능성 · 에너지 전환 촉구
 - 4 고령화 사회 대응
 - 5 불평등 · 양극화 해소

사업방식



1 사회적경제 인내자본 공급



2 사회적목적 프로젝트 지원



3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육성

핵심과제

참여주체 개발 및 역량 강화

다자간 연대 · 협력 구조 창출

지속가능한 제도기반 조성

사 례

광진주민연대 공유공간 '나눔'

'17년 서울 광진구에서 **광진주민연대, 행복중심 광진생협, 더불어내과의원,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등 9개 단체가 안정적인 지역 활동기반 마련을 위해 공동으로 지역 부동산을 매입해 공유공간 조성

소요자금: 총 36억원(건물값 32억원, 인테리어 비용 4억원)

조달방법: 은행대출 65%, 자부담 35%(9개 지역단체)

사회적협동조합도우누리

노인돌봄, 아동심리발달지원, 노인전문요양원 운영 등 사업을 하는 돌봄 노동자들의 사회적협동조합

'18년 말 현재 조합원 461명, 직원 624명, 매출 112억원

'08년 자활공동체로 출발, '10년 사회적기업 인증,

'13년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 남양주의 '일과 나눔' 사회적 협동조합 사례

사 례

의료복지건강돌봄 커뮤니티 타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마을/지역과 결합된

의료/건강/돌봄 체계 구축 활동으로 '90년대 중반 시작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16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해 '커뮤니티케어' 사업 진행

'19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마을공동체 기반 탈 시설

노인돌봄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추진 - 안산, 화성 등

참여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빈집 매입 등을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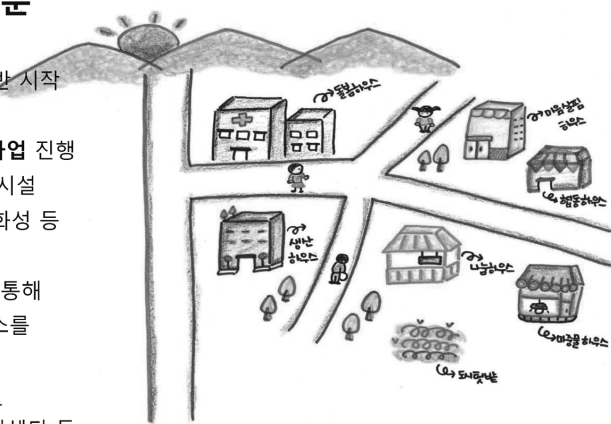
돌봄이 필요한 노인 대상 주거공간과 돌봄서비스를

결합해 제공하는 방안 논의 진행

민간 차원에서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된 지역에서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을 연계해 식당, 데이케어센터 등

기능을 갖춘 돌봄 거점공간 조성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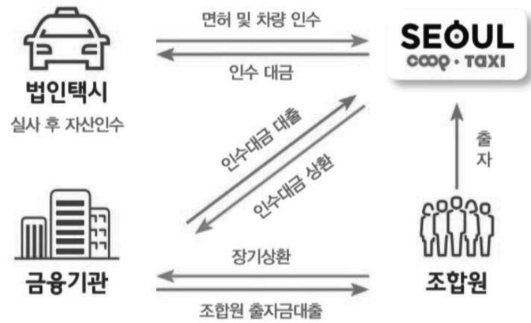


사례

워커쿱 BTS 지원단 택시회사 인수 노협전환 프로젝트

노동자협동조합 인수전환설립지원단, '서울형 택시협동조합' 모델 추진
 '19년부터 서울 내 법인택시 4개를 인수해 노동자협동조합 전환 추진
 시중은행, 사회적금융기관, 보증기관, 신협 등 금융공급자를 대상으로 인수전환 프로젝트 설명회 진행
 기존 인수금융과는 달리, 협동조합의 취지에 공감하는 조합원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고, 낮은 신용등급으로 일반 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개인도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금융의 역할 요구

인수자금 흐름



사회적 경제 과제와 제도개선

사회적 경제 정책 과제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사회적 가치법의 연내 입법

- ▶ 민간의 활력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혁신하고, 지역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 ▶ 양대 법의 신속 입법을 통해 판로 및 정부조달을 비롯하여 제반 관련 입법 전개 가능

유망분야 진출 계획 중 중점 관리 실행

- ▶ 사회서비스 : 공공성을 갖춘 민간역량으로서 서비스와 일자리 질의 제고, 지역맞춤형
- ▶ 프랜차이즈, 플랫폼노동자 이슈 : 협동조합 등 다양한 대안 및 조직화 구상 필요
- ▶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 그린뉴딜 관련 :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 활성화, 사회적경제 방식 도입

사회적 가치 측정 및 평가기준 및 시스템 개발

- ▶ 사회적 금융 / 임팩트 투자 활성화
- ▶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성과의 제시와 함께 혁신

사회적 경제 정책 과제

한국판 뉴딜

- ▶ 디지털 뉴딜과 함께 그린 뉴딜을 통해 저탄소 친환경경제체 속에서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를 전환, 재생에너지 확충에 사회적 경제가 적극 선도
- ▶ 휴먼 뉴딜을 통해 고용안전망 구축,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제 개편 등 고용 시장 진입 및 전환을 지원함에 있어 사회적 경제의 역할

사람중심, 포용성장 기조에서 사회적 경제를 통해 공공혁신, 지역개발 혁신

- ▶ 사회적 경제를 통한 고용정책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인적자원개발과 일자리 인프라 구축과 연계하여 추진
- ▶ 사회적 경제를 통한 사회서비스 정책은 공공성의 제고와 민간의 활력을 함께 이루어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함.
- ▶ 지방정부의 권한과 자원동원능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개발과 균형발전을 촉진
- ▶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연계하여 협업 및 상호 강화 노력

사회적 경제 정책 과제

지역

- ▶ 주민자치, 참여 강화 기제 - 민관협치를 필두로 다양한 부문/조직간 협업 강화
- ▶ 사회적 경제 당사자 조직의 경쟁력 강화 와 리더십 개발
- ▶ 중간지원조직들의 역량 개발을 위한 전략과 과감한 투자 (금융 과 자본시장 등 활용)

지방정부

-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조직관리 - 전담부서 지정, 인력재배치
- ▶ 협업체계 구축 - 부단체장 중심 사회적경제 행정협의회, 민관공동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운영
- ▶ 공무원 채용면접, 배치, 성과평가제도 운영, 교육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 ▶ 예산, 기금 등 재정운용 전 과정(편성-집행-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
- ▶ 사회적경제기업 통계 구축/관리

사회적 가치 창출 영역



[출처] UNDP, UN SDGs

사회적 가치 기본 법안의 <사회적 가치>

- 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권
- ② 재난과 사고로부터의 안전
- ③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 복지
- ④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 ⑤ 사회적 약자에 기회 제공과 사회 통합
- ⑥ 양질의 일자리 창출
- ⑦ 공동체 복원과 지역사회 활성화
- ⑧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 ⑨ 자발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 ⑩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 ⑪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시민적 권리
- ⑫ 그 밖에 공동체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

[출처] K-Management 4.0
사회가치경영, 2장, 사회적
가치란 무엇이며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사회가치영역	UN SDGs	JP 모건	엘링턴	기획재정부	SK그룹	KAIST
1	환경 기후 생태계, 육상 생태계		환경, 안전	안전·환경	환경	환경
2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일자리 창출		일자리
3	에너지 에너지	물	에너지·자			에너지
4	빈곤 빈곤, 기아		영양·빈곤		빈곤	빈곤
5	건강 건강·복지, 위생	건강	건강		보건	건강·노령화
6	양성평등 양성평등, 불평등		여성·양성평등		사회제도	여성
7	주택	주택	인구		인구	주택·도시화
8	공동체 공동체			사회통합	공공이익	지역개발
9	교육 양질의 교육	교육	교육			교육
10	금융	미소금융	금융			금융
11	국제개발 국제개발·파트너십					국제개발·적정기술
12	문화·예술		정보기술			문화·예술
13	책임 있는 소비·생산	책임 있는 소비·생산			소비자 보호	
14	노동				노동	
15	상생협력			상생협력·약자보호	동반성장	
16	사회공헌				사회공헌	
17	거버넌스·인권	평화·정의		윤리·인권		거버넌스
18	산업·혁신	산업·혁신·인프라				

공공부문에서의 사회적 가치 창출

공기업에서의 공공성이 낮게 평가 받는 이유 (이정현, 2018)

-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영향
- 공공기관의 민간기업화(Corporatization) 또는 민영화 강조
-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공공기관의 공익성 제고 요구 강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사회적 가치 창출

- 사회적 가치 창출은 공공성의 중요한 부문 (개인 이익보다 사회의 이익)
-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사회적 가치 창출 강조
-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사회적 가치 창출을 주요 영역으로 강조

문재인 정부의 경영평가 범주별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2017)

[1] 경영관리

- ① 경영전략 및 사회공헌 [전략기획 및 사회적 책임 (5점) 등], ② 업무효율,
- ③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④ 재무예산관리, ⑤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2] Work-Life Integration : 자신, 가정, 직장, Commun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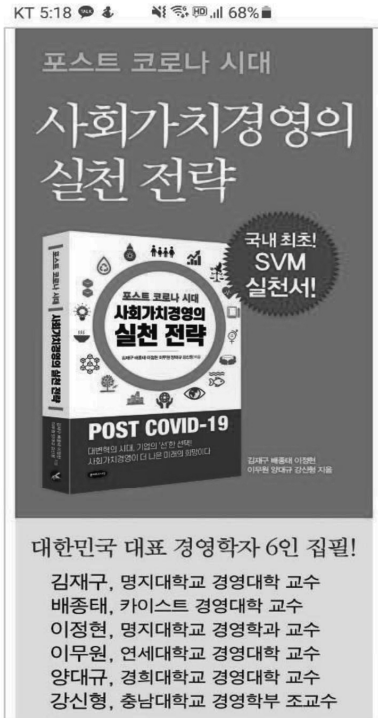
- 공공기관의 주요사업별 계획·활동·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 비계량 또는 계량 세부평가지표 활용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에서의 사회가치경영

	민간기업	공공기관
사회가치경영 도입 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의 사회적 역할을 더 강조 하는 설립자 또는 최고 경영자의 인식 변화 • 사회적 가치창출이 조직의 정당 성 확보에 필요하다는 인식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는 설립 관련 법률과 기관 미션 • 조직의 사회적 역할을 더 요구하는 사회적 압력과 여건 변화 (예: 문재인 정부 출범)
사회가치경영 도입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가치창출과 사회적 가치 창출의 동시적 · 균형적 추구 • 사회적 기여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목적인 공공적 역할의 실현을 위한 사회가치경영 • 경제적 가치 실현보다 사회적 가치창출 우선
사회가치경영 추진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여건에 따라 다르나 전담부서나 위원회를 통한 통합적 추진 • 기업별 추진방식 차이가 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평가 관련 부서의 주도성 • 공공기관 간의 동형화 발생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의 주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자가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로부터 기업의 설립과 운영이 구체화 • 더 구체적인 이해관계자집단에게 제공하는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설립목적과 관련 법 내에서 사회적 가치의 내용 및 가치 창출 방법이 구체화 • 더 포괄적인 이해관계자집단(국민 전체)에 제공하는 가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의 동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리더의 의지 및 기업 문화 (리더-팔로어 모형) • 이해관계자집단의 공감과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정책 및 직원들의 공감대 (프린시פל-에이전트 모형) • 이해관계자집단의 공감과 지원

[출처] 사회가치경영의 실천전략, 김재구, 배종태 외 4인, 2020. 6. 출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가치경영의 실천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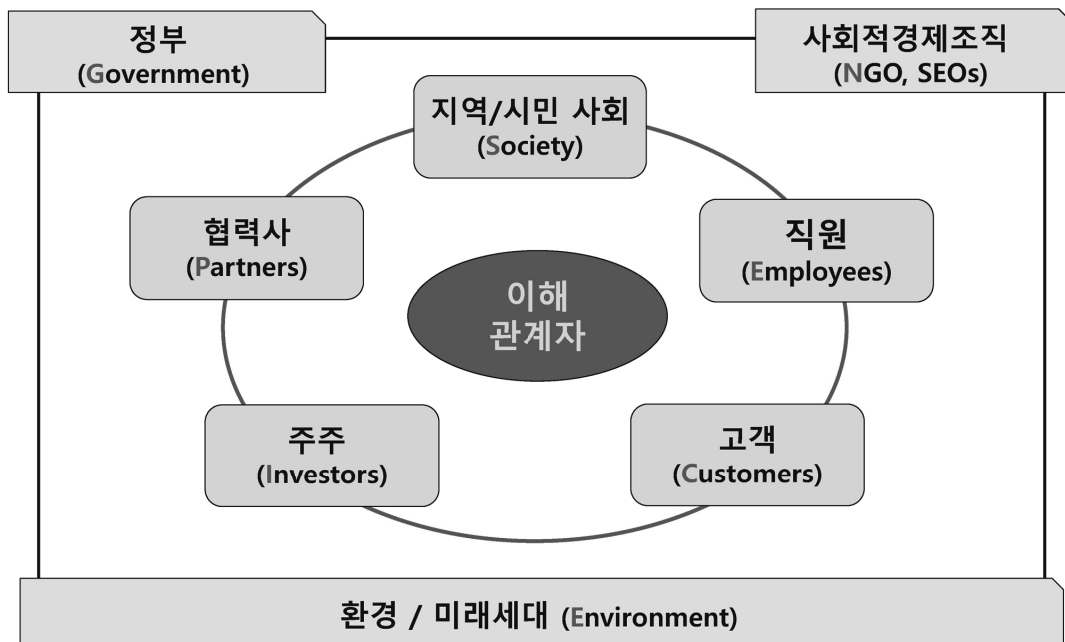


대한민국 대표 경영학자 6인 집필!

- 김재구, 명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배종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 이정현,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이무원,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양대규,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강신형,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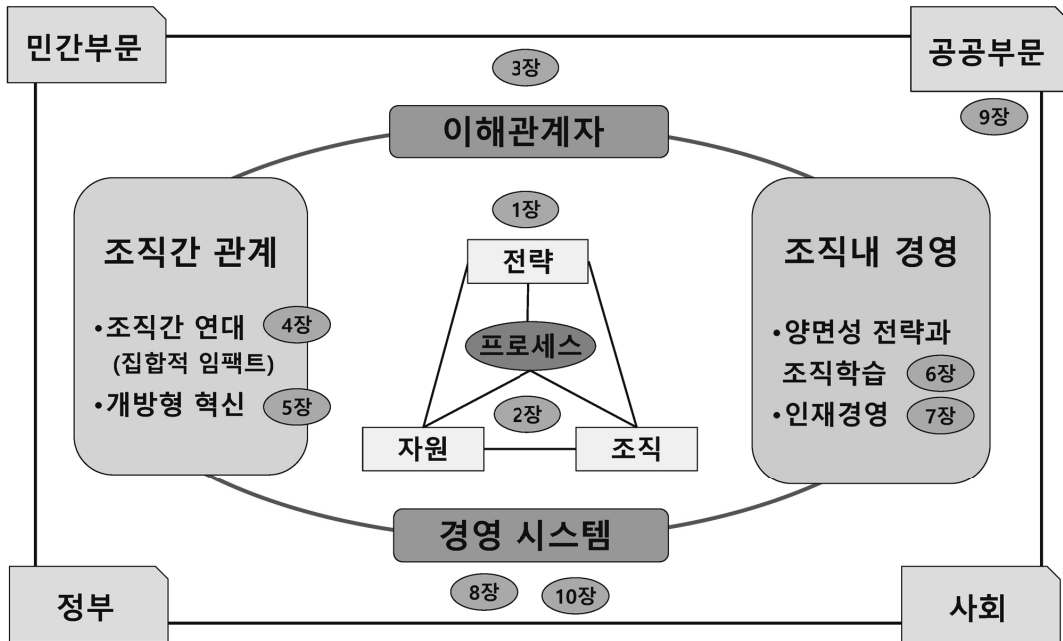


확장된 이해관계자 모형 (8자 모형, SPICE-GEN 모형)



[출처] 사회가치경영의 실천전략, 김재구, 배종태 외 4인, 2020. 6. 출간

사회가치경영 Framework



[출처] 사회가치경영의 실천전략, 김재구, 배종태 외 4인, 2020. 6. 출간

사회가치경영 정착을 위한 실천 방안

	시각 및 접근 방법	실천 방안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동시 추구 사회적 가치창출 전략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의 미션/비전/경영방침과 평가 기준 등에 사회적 가치 창출 반영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사업모델 개발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부문별 사회적 가치창출 영역 파악 및 인정 사회적 가치창출 프로세스 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가치 측정/평가의 세부기준 마련 사회적 가치 측정 시범 운영 및 확산
자원 및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가치 창출·측정 전문가 그룹 양성 및 네트워킹 사회적 가치 경영 관련 연구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내에 사회적 가치 연구그룹 결성 및 자료 축적, 사회가치 창출을 위한 조직능력 강화 조직구성원의 다양성 강화 및 사회적 책임 교육 확대
조직 및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의 존재 이유와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공감대 형성 사회적 가치창출 생태계 조성 노력 및 연대 강화, 사회적 인증 메커니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가치창출을 통한 기관의 지속 성장 추구 및 관련 조직 구축 공동체 발전과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함께 추구하는 평가 시스템 구축

[출처] 사회가치경영의 실천전략, 김재구, 배종태 외 4인, 2020. 6. 출간

이해관계자들과의 파트너십 구축

이해관계자 구분	파트너십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주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주에 대한 사회가치경영의 장기적 효과성에 대한 홍보 • 사회적 미션 중시, 주주 비율 확대와 경제적 가치 편향, 주주 비율 관리 방안 추진(자사주 구입 및 소각 등)
종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가치경영의 이해관계자모형 실현을 위해서는 내부 이해관계자인 종업원 관계가 중요함 • 종업원의 권리보호에 적극적이어야 하며 노사관계론적 접근에 비판적인 현재의 인적자원관리 방식을 탈피해야 함 • 노사담합이 이해관계자모형 추구를 저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이해관계자모형의 넓은 맥락에서 종업원 관계에 접근해야 함
소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와의 소통 강화를 통해 그동안 간과된 소비자층 또는 소비자 니즈를 발견해야 함 • 기업 성장 정책, 이익 정책에 대한 소통 필요 • 기업 비즈니스 방식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업 방식 구체화가 필요함
협력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경계를 넘어 기업 비즈니스의 글로벌 가치사슬 내 공급업체 전반을 이해관계자집단의 범위로 사고하는 접근법이 필요함
지역사회·로컬 클러스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기업 내부 문제 해결이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함 • 지역사회와의 협업으로 인한 사회적 자본 형성과 로컬 클러스터 창출은 사회적 가치 지향 기업의 자산이자 경쟁력 원천이 될 수 있음

[출처] 사회가치경영의 실천전략, 김재구, 배종태 외 4인, 2020. 6. 출간

이해관계자들과의 파트너십 구축 (계속)

이해관계자 구분	파트너십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비영리조직·사회경제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 추구하는 특정 사회적 가치 관련 경험과 역량이 풍부한 비영리 조직 및 사회경제조직과의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함
정부·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민간기업의 사회가치경영을 촉진하거나 지체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설립 자유화 관련 정부 정책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사회경제조직과의 파트너십의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함
자연환경·미래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환경처럼 발언할 수 없는 존재 혹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 발언이 불가능한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성 관점의 유지가 필요함 • 기업 이해관계자 범위의 수평적·시간적 확대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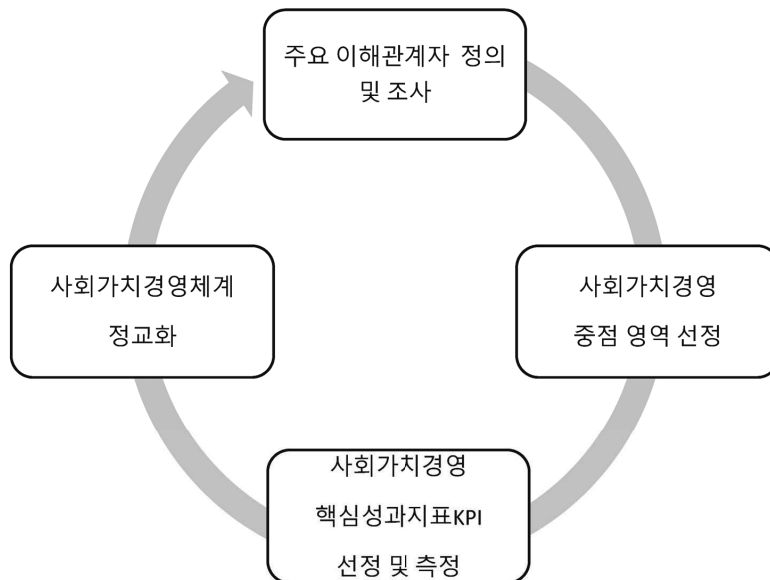
[출처] 사회가치경영의 실천전략, 김재구, 배종태 외 4인, 2020. 6. 출간

이해관계자 모형 실현을 위한 조직화 방안

사회가치 지향 이해관계자모형 실현을 위한 조직화 방안	
현행 조직들 내 조직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자들의 이사회 참여 • 이해관계자들과의 운영협의체 구성 •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업 촉진을 위한 권한 위임 • 조직 경계 완화와 이해관계자조직과의 인적 교류 • 조직 경영에 대한 내외부 모니터링 및 감사 허용
현행 조직들 탈피 조직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미션 우선을 위한 상장·비상장 선택 • 영리조직 및 비영리조직 분리 및 병행 • 영리기업의 협동조합·사회적 기업으로의 조직 형태 전환

[출처] 사회가치경영의 실천전략, 김재구, 배종태 외 4인, 2020. 6. 출간

사회가치경영 체계 정교화 사이클



[출처] 사회가치경영의 실천전략, 김재구, 배종태 외 4인, 2020. 6. 출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사회적 경제

주제발표 II

한국판 뉴딜과 사회적 경제: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

김 용 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더불어민주당 정책토론회(7.20)

한국판 뉴딜과 사회적경제

-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 -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용범

1

- I 코로나19 이후 한국경제
- II 한국판 뉴딜의 추진방향
- III 한국판 뉴딜의 주요과제
- IV 한국판 뉴딜과 사회적경제
- V 향후 추진계획

2

I. 코로나19 이후 한국경제

- Turning Point? It depends

3

❖ 세계경제와 한국경제는 팬더믹 블루를 겪고 있습니다.

👉 대공황 이후 전례 없는 경기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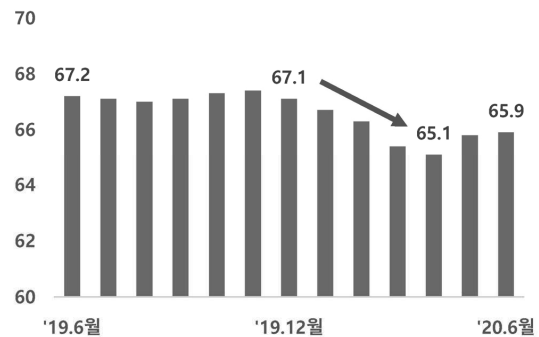
“Worst Economic Downturn since the Great Depression” - IMF

세계경제 성장률('70~'20)



*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 ('19) 2.9 → ('20) △4.9

한국 고용률 추이(15~64세, '19.6~'20.6)



* 한국 고용률('19.6→'20.6, %) : 67.2→65.9 <△1.3%p>

4

❖ 코로나 전과 후는 경제·사회구조에서 큰 변화가 있습니다.

☞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모습일 것”

(Ian Bremmer, 뉴욕대 교수)

새로운 발전경로로의 도약(Bounce Forward)을 위해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야 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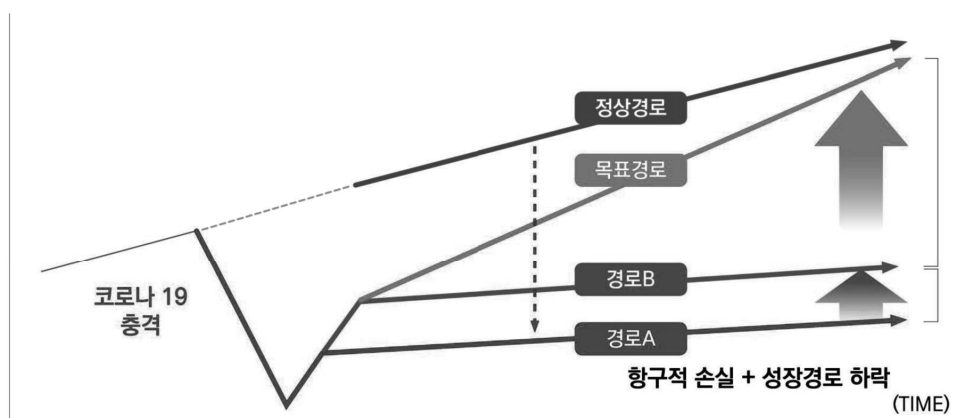
	BC(Before Covid19)	AD(After Disease)
대 내	대 면	비대면, 그린 경제
대 외	글로벌화, 자유무역	자국중심주의, 보호무역
일의 방식	오프라인 집단중심 정규직	온라인 개인중심 노동형태 다양화

5

❖ 코로나19 이후 국가·경제 위상을 가를 기로에 서 있습니다.

☞ 조기 극복, 구조적 변화 대응 실패 시 성장경로 자체 하락 가능성

☞ 버티기, 일어서기에 이어 신속한 개혁을 통한 달려가기



6

Ⅱ. 한국판 뉴딜의 추진방향

- 위기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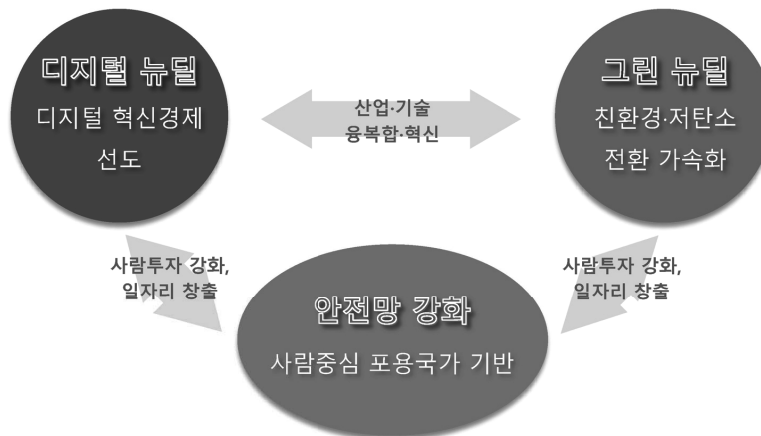
7

❖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새로운(New) 약속(Deal)입니다.

비전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대전환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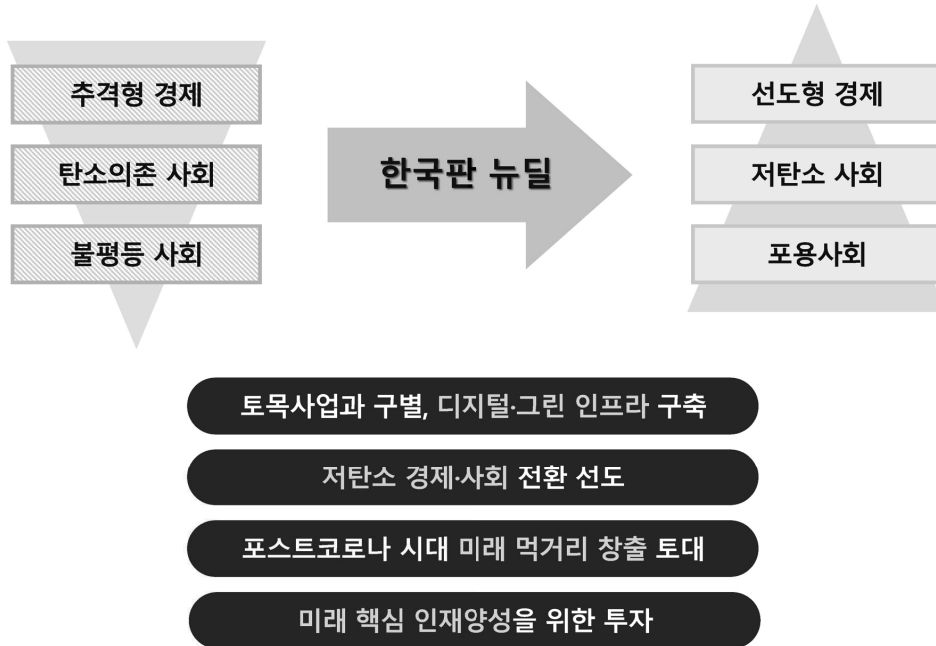
정책
방향
2+1



'25년까지 160조원 투자, 일자리 190만개 창출

8

❖ 한국판 뉴딜은 이렇게 다릅니다.



9

Ⅲ. 한국판 뉴딜의 주요과제

- 『2+1』 = 디지털·그린+안전망

10

❖ **디지털** 국민의 삶과 경제에 디지털을 입히겠습니다.

58.2조원 투자, 일자리 90.3만개 창출

D.N.A. 생태계 강화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11

❖ **디지털** 국민의 삶과 경제에 디지털을 입히겠습니다.

D.N.A. 생태계 강화

**데이터 생태계
구축**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14만개) 및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10→30개) 구축
- AI 학습용 데이터 제공(1,300종 추가 구축)

5G·AI 융합 확산

- 실감콘텐츠, 자율주행차 등 5G 기반 융합서비스
- 스마트공장 12만 개 구축 및 중소기업 AI 바우처 등 AI 활용 산업고도화

지능형 정부 실현

- 부동산 거래 등 블록체인 시범사업
- 정부청사 5G망, 공공보안 클라우드 센터 등 구축

**K-사이버
방역체계**

- 보안컨설팅 등 사이버위협 대응
- 사이버 보안기업 육성

12

❖ **디지털** 국민의 삶과 경제에 디지털을 입히겠습니다.

비대면 산업 육성

교육

- 초중고 교실 내 고성능 WiFi 100% 구축 등 디지털 기반 스마트 학교 구축
- K-MOOC 내 4차 산업혁명 적합 강좌 2,045개 개발

의료·돌봄

-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 18개소 구축
- 취약계층 디지털 돌봄(12만명), 만성질환자 웨어러블기기 보급(20만명) 확대

근무

- 공용 화상회의실 1,562개소 구축 등 비대면 업무환경 조성
- 원격근무 시스템 구축 및 컨설팅 바우처 지원(16만개사)

비즈니스

- 소상공인 32만명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 소상공인 대상 스마트 상점 10만개, 스마트 공방 1만개 구축

13

❖ **디지털** 국민의 삶과 경제에 디지털을 입히겠습니다.

SOC 디지털화

4대 핵심인프라

- 간선망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구축 및 국토 3D 지도 등 디지털 트윈
- 국가하천 등 원격제어 및 실시간 모니터링(137개소)

도시·산단

-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등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 통합관제센터(10개소), 유해물질 원격 모니터링(15개소) 등 스마트 산단 구축

스마트 물류

- 중소기업 스마트 공동물류센터(11개소) 구축
- 농축산물 온라인 유통 플랫폼 구축

14

❖ **그린** 탄소 제로화 사회를 지향하겠습니다.

73.4조원 투자, 일자리 65.9만개 창출

생활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15

❖ **그린** 탄소 제로화 사회를 지향하겠습니다.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 노후 공공임대주택(23만호) 등 그린 리모델링
- 그린 스마트 학교 조성(2,890+α개동)

녹색생태계 회복

- 환경·ICT 기술 기반 맞춤형 환경 개선(25개 지역)
- 도시 녹지 조성(630ha+586개소)

물 관리체계

- 상수도(209개) 관리 전과정 ICT·AI 스마트화
- 광역상수도 정수장 고도화 및 노후상수도 3,332km 개량

16

❖ **그린** 탄소 제로화 사회를 지향하겠습니다.

저탄소 · 분산형 에너지

스마트그리드

- 스마트 전력망 구축(500만호)
- 도서지역 친환경 발전시스템 구축(42개)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풍력·수소 등 대규모 R&D·실증사업
- 주민참여 이익공유형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그린 모빌리티

- 전기차 113만대(누적) 보급 및 충전인프라 45만대(누적) 확충
- 노후경유차 223만대 친환경 전환

17

❖ **그린** 탄소 제로화 사회를 지향하겠습니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녹색기업·산단

- 환경·에너지 분야 123개 유망 중소기업 전주기 지원
- 스마트 생태공장 100개소, 클린팩토리 1,750개소 등 친환경 제조공정 확대

녹색혁신 기반

- 대규모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 상용화 기반 마련(~23년)
- 녹색금융 2.1조원 공급(융자 1.9조, 펀드 0.2조)

18

❖ **안전망** 사람 중심의 포용가치를 우선하겠습니다.

28.4조원 투자, 일자리 33.9만개 창출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사람 투자

19

❖ **안전망** 사람 중심의 포용가치를 우선하겠습니다.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전국민
고용안전망**

-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9→14개 직종)

**포용적
사회안전망**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기초생활보장 보장성 강화
-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추진(22년 시범사업)

**고용보험
사각지대 보완**

-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저소득 근로빈곤층 대상 직업훈련, 일경험 지원)
- 영세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전직장려수당 100만원, 사업화자금 1천만원)

**고용시장
진입 및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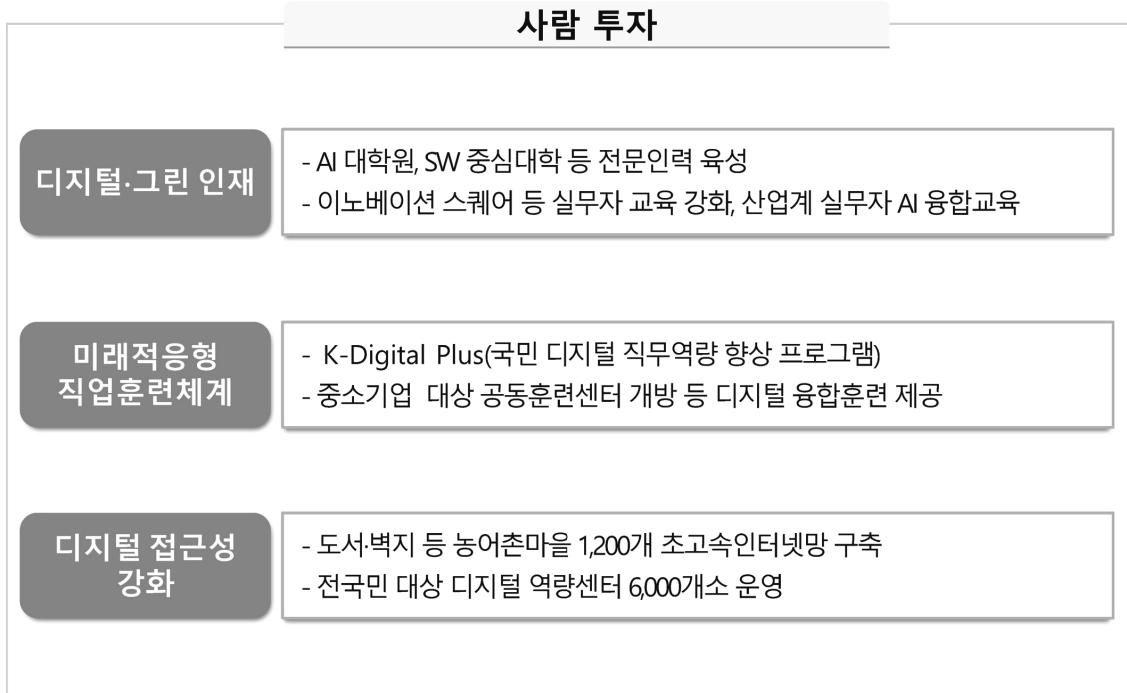
- AI 자동추천 시스템 등 비대면 고용서비스 강화
- 중소·중견기업 IT 직무 청년채용시 인건비 지원(월 180만원, 6개월 한도)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 산재예방 정기기술지도(연 34.3만회) 및 원포인트 점검(연 6.6만회)
- 소상공인 작업환경 개선 지원(1만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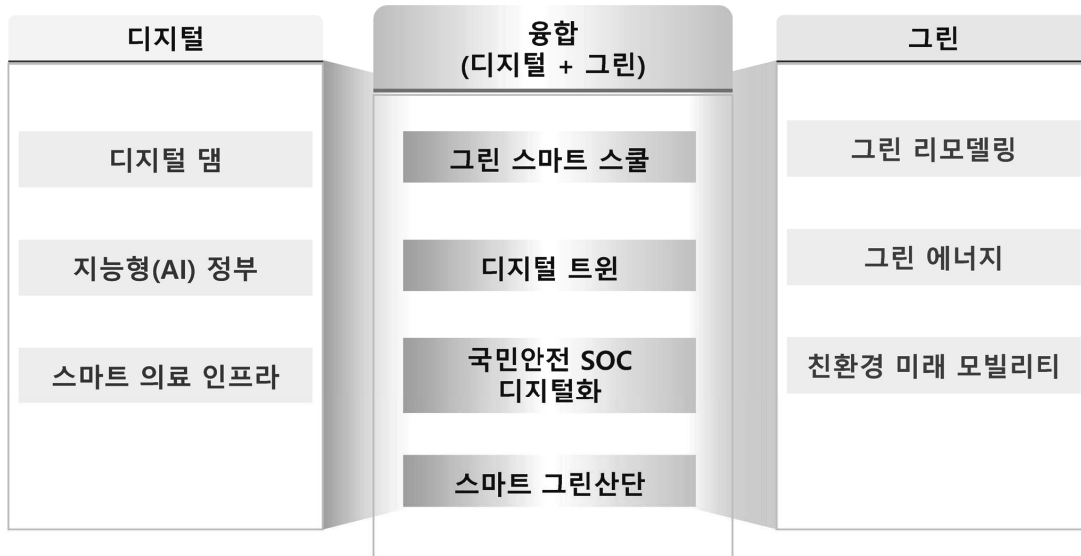
20

❖ **안전망** 사람 중심의 포용가치를 우선하겠습니다.



21

❖ 20개 프로젝트를 융합한 10대 대표과제입니다.



22

IV . 한국판 뉴딜과 사회적경제

- 뉴딜의 성공과 사회적경제의 성장

❖ 사회적경제는 이제 막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 17년 이후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등 19개 대책 발표

초기 활성화 기반 마련

생태계 조성	진출경로 다각화	거버넌스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금융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금융 확대 * ('18) 1,937억원 → ('19) 4,425억원 - 은행권 사회적금융 확대 * ('18) 5,374억원 → ('19) 8,498억원 - 사회적금융 평가시스템 - 중개기관 DB 구축 ○ 공공조달 활성화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의계약 확대 - 국·공유재산 사용료율 인하 - 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모델 다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 사회적 농장, 발달장애인 - 주거환경 사회주택, 도시재생 - 문화·예술 생활 SOC, 지역관광 - 지역연계 어촌뉴딜300, 산림발전소 - 소셜벤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 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개 관계 부처 TF - 사회적경제 전문위원회 ○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시·도 사회적경제 조례 제정 및 전담조직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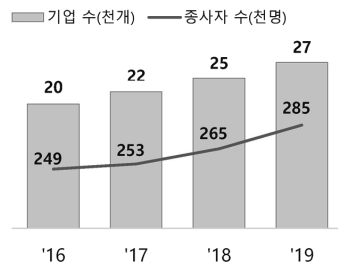
❖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17~'19)
사회적경제의 빠른 성장 및 사회기여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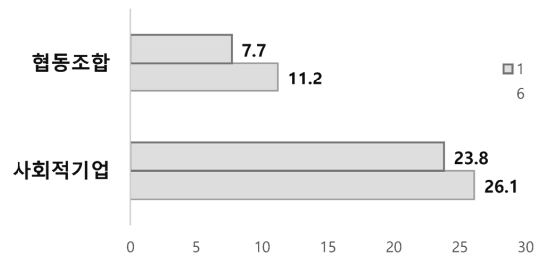
기업수 30% ↑
종사자 수 15% ↑

취약계층 종사자 수 18% ↑
(협동조합+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기업 및 종사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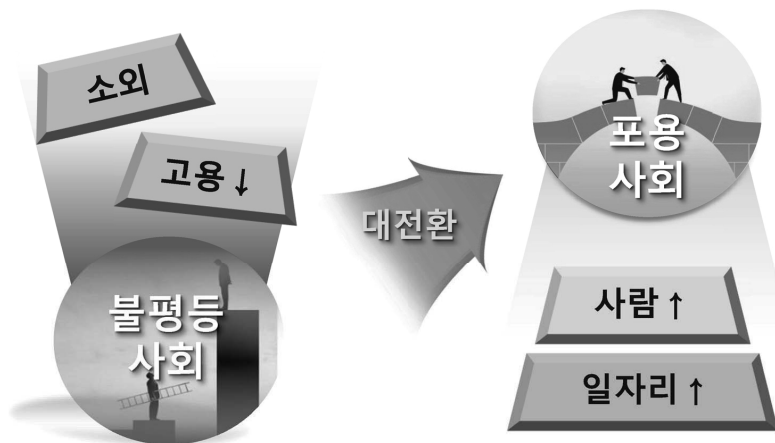
취약계층 고용 규모 (천명)



25

❖ 사회적경제는 한국판 뉴딜과 지향점이 같습니다.

"불평등사회"에서 "포용사회"로의 도약
"일자리"를 지키고 "사람"을 돌보는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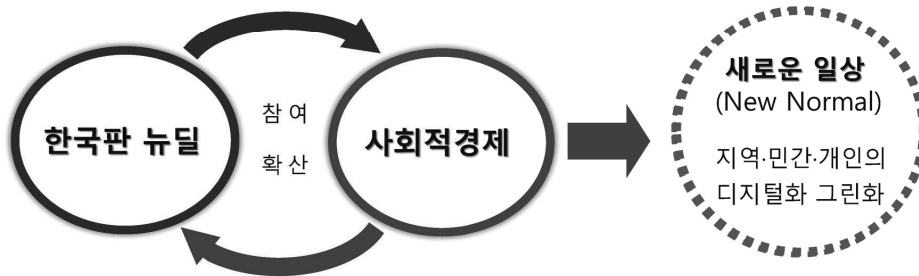


26

❖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역할 모색이 필요합니다.

❖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입니다. 지역으로, 민간으로 확산되어 대한민국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VIP, 국회 개원연설, '20.7.16)

- 한국판 뉴딜에 적극 참여 > 디지털 + 그린 기반 사회적경제기업으로의 전환
- 한국판 뉴딜의 확산 > 참여, 연대, 협력, 자생 → 지방으로, 민간으로, 시민사회로
- 한국판 뉴딜의 문제 해결자 > 디지털 격차 완화, 소외지역 그린 전환을 지원



27

❖ **디지털** 디지털 격차 완화 지원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디지털 전환

사회적경제와 연계 가능한 한국판 뉴딜 사업 (예시)

	분야	사업 예시
디지털	D.N.A. 생태계 강화	디지털 콘텐츠(실감 융합 콘텐츠) 개발, 사이버 보안컨설팅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AI 솔루션 바꾸처,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e-러닝 가상훈련 콘텐츠 개발(VR, AR), 온라인 훈련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IoT·AI 활용 디지털 돌봄 원격근무 시스템 구축컨설팅 바꾸처 스마트 상점, 스마트 공방 구축

28

❖ **디지털** 디지털 격차 완화 지원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디지털 전환

사례 ① 취약계층 교육콘텐츠 개발·보급

- ✦ 외국에 나갈 기회가 적은 취약계층 대상 VR기반의 외국어 학습 프로그램 제공

- A 사회적기업



사례 ② 모바일 의료실습 가상훈련

- ✦ 모바일 앱을 통해 응급상황에 대한 가상훈련 제공, 현장의 의료실습 부족 문제 해결

- B 소셜벤처



❖ **그린** 민간·지역의 그린 확산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그린 전환

사회적경제와 연계 가능한 한국판 뉴딜 사업 (예시)

	분야	사업 예시
그린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그린 리모델링, 그린스마트 스쿨
		도심녹지 조성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주민참여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산 사업
		위기지역 대상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지원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구축	녹색선도 유망기업 육성,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 등
		스마트 생태공장, 클린팩토리, 미세먼지 방지설비 지원

❖ **그린** 민간·지역의 그린 확산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그린 전환

사례 ③ 그린 리모델링

📌 지역의 빈집 개발 및 리모델링 사업 수행

- C 예비사회적기업



사례 ④ 도시숲 조성

📌 숲 체험 프로그램, 낙후마을 정원조성 등

- D 협동조합



31

❖ **그린** 민간·지역의 그린 확산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그린 전환

사례 ⑤ 친환경 에너지 자립단지

📌 국내 최초 협동조합 방식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단지

- E 협동조합



사례 ⑥ 가상발전소

📌 지역 내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에너지 저장장치 등을 연계, 중개거래 실시

- F 에너지협동조합



32

❖ **안전망** 취약계층 보호 및 일경험 제공

사회적경제와 연계 가능한 한국판 뉴딜 사업 (예시)

	분 야	사 업 예 시
안전망	고용 사회 안전망	국민취업지원제도(저소득 근로빈곤층 직업훈련, 일경험)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창업, 재기, 성장 지원
	사람투자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비대면 대체자료 제작 등 취약계층 디지털 접근성 강화

33

❖ **안전망** 취약계층 보호 및 일경험 제공

사례 ㉗ 취약계층 고용 기회 확대

- 자폐인 디자이너 직업군 개발
→ 취약계층 일경험 및 자립 지원

- G 사회적기업



사례 ㉘ 발달장애인을 고용한 AI 소셜벤처

- 집중력의 잠재력이 있는 발달장애인들에게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일자리 제공

- H 소셜벤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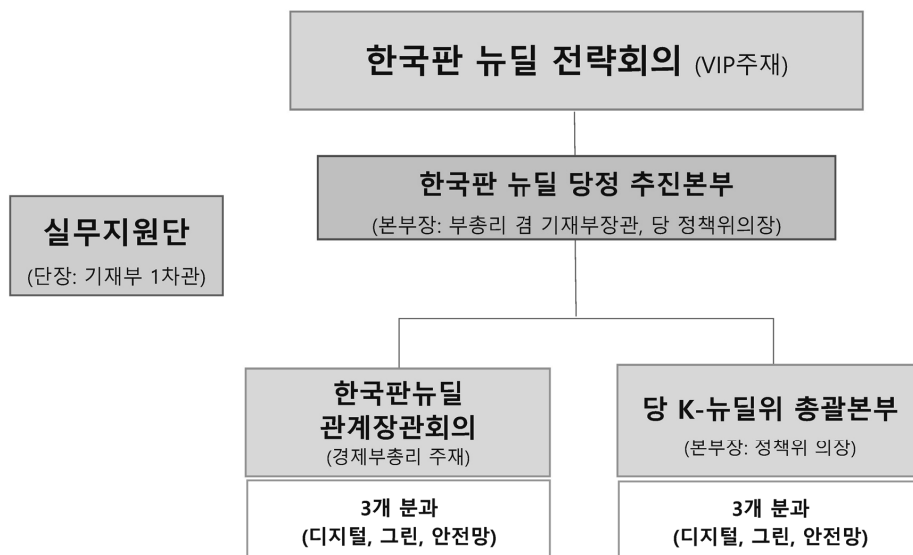
34



V. 향후 추진계획

35

❖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통해 뉴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입법과제 모색도 지속 추진

36

감 사 합 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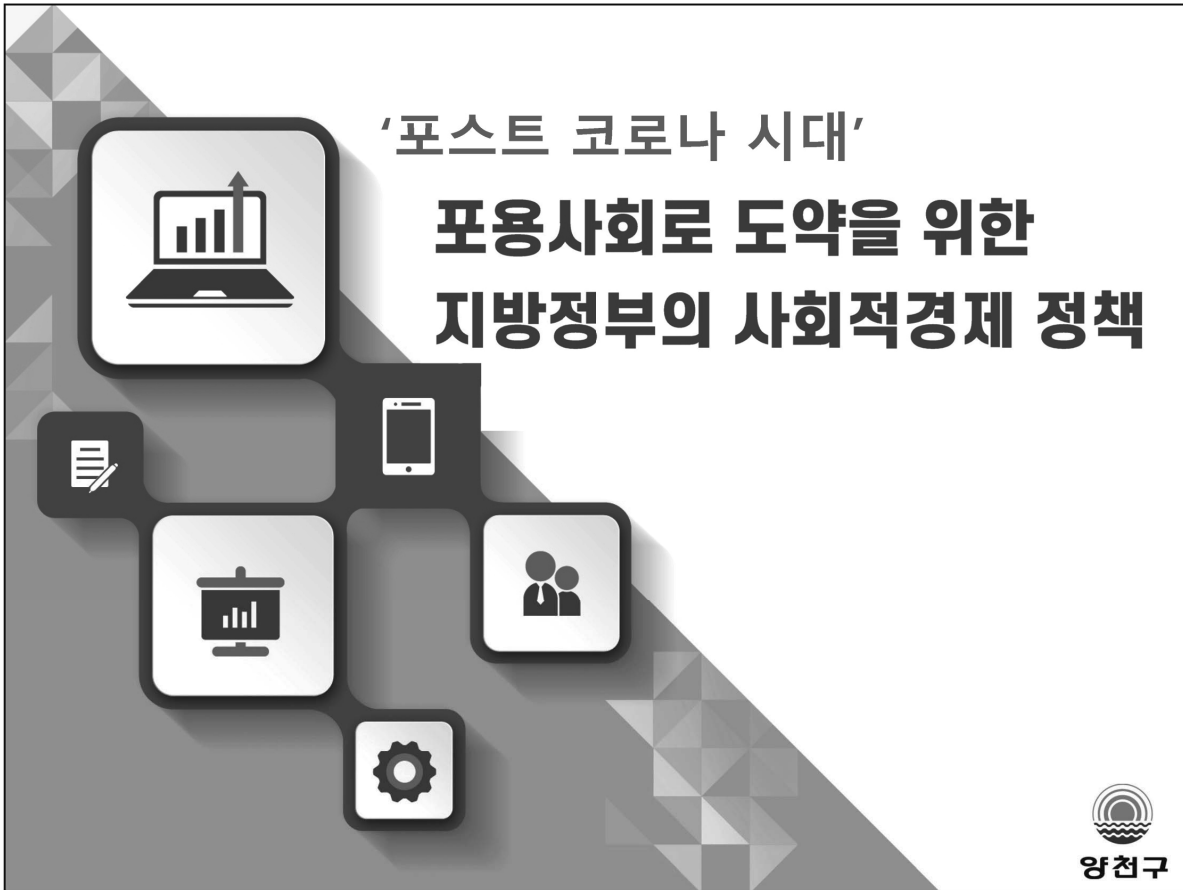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사회적 경제

주제발표 III

‘포스트 코로나 시대’
포용사회로 도약을 위한
지방정부의 사회적 경제 정책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 /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부회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 포용사회로 도약을 위한 지방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양천구

포스트 코로나, 포용사회 출발점은 사회적경제로부터...

“힘든 순간을 함께 이겨내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 우리 가족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족챌린지 #양천구사회적경제 #두팔로



포스트 코로나, 포용사회 출발점은 사회적경제로부터...

“양천구 협동조합 기부 릴레이”

경제 경제일만 **한겨레**

NEWS.CO.KR

사회적경제-지방정부, 코로나 지원 사각지대 극복

등록 2020-03-31

금

소셜벤처, 코로나 사각지대 위해 본업 연계한 나눔 활동 전개
양천구, 사회적경제 조직과 손잡고 취약계층에 마스크 직접 전달
발달장애 등 느린 학습자 위해 코로나 그림카드 안내책자 제작도



지난 11일 김수영 양천구청장이 양천가방협동조합을 방문해 활동조합에서 생산한 마스크를 살펴보고 있다. 양천구 계

참치마요 프로젝트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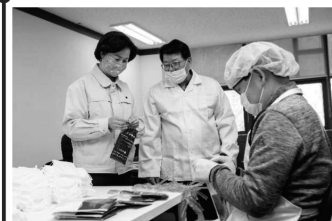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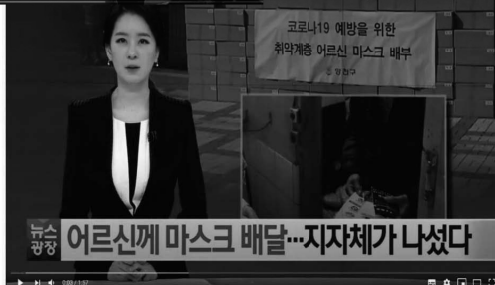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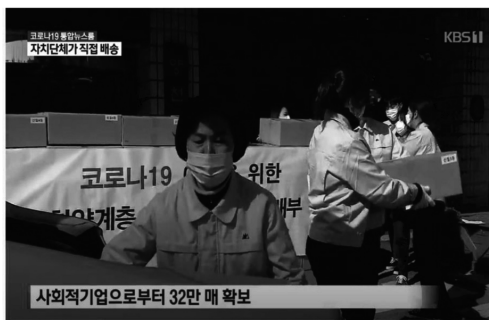
발달장애나 경제적 지능을 가진 느린학습자들이 질병을 방지해야 한다는 위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대응책이다. 이렇듯문거제, 파지마이 등이 함께 시작한 사회공헌 프로젝트입니다.

많은 느린학습자들이 질병이 생기는 이유거나 중외의원을 이어받았습니다. 참치마요 프로젝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병에 관련한 식품 및 도시락 위생용품 그림카드를 개발하여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청 봉사를단을 운영하여 느린학습자들에게 질병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포용사회 출발점은 사회적경제로부터...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한 취약계층 마스크 배부




중소기업유통센터 '노마진 마스크 판매 행사'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사회적경제





1. 기술기반 사업모델 구축
2. A.I. 빅데이터 활용 창업지원
3. 사회서비스 제공에 민간 기술 도입
4. 마을교육의 사회적경제 기능 강화
5. 디지털 사회적경제의 일자리창출




양천구

1. 기술기반 사업모델 구축(사례)



- ✓ **빅워크 (소셜벤처)**
 - 걸으면 기부되는 앱 서비스 개발
 - '11창업. 비대면 사회공헌활동 각광
 - '20현재 511억걸음 55억 기부금 달성

대한용대이스라엘
강각성척후염 환우를 위한
bigwalk 캠페인
- ✓ **테스트웍스 (소셜벤처)**
 - A.I 데이터구축 및 S/W 테스트 기업
 - '15창업 IT분야 경단녀, 장애인 고용
 - '19 대통령 북유럽 순방시 동행

yes NEWS 인공지능 데이터 다루는 발달장애인...테스트웍스

2. A.I. 빅데이터 활용 창업지원

✓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 기초단체 단위의 지역경제 데이터 부족

업종별 기업체수, 지역별 종업원수, 일자리 증감, 고용률 등 지역경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필요

● 민간단체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확보 한계

지역별 산업현황 등의 데이터 수집, 활용이 실시간으로 가능
그러나 과도한 운영예산으로 개별 지방정부 차원에서 도입 어려움



지역산업생태계 상황판

- 지역특화형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창업성공률제고,
- 지역기반 일자리창출로 청년실업해소, 상향식 일자리사업 및 정책결정에 활용

3. 사회서비스 제공에 민간 디지털 기술 도입

민간 ▶ 스타트업 기업의 신기술 개발 및 제안



공공 ▶ 신기술의 테스트베드 역할 수행



민간 ▶ 사업영역 확장에 따른 추가 고용 창출



공공 ▶ 양질의 지능형 공공서비스 제공

▶ 민간 기술개발 장려 및 신규 일자리 창출



스피커를 통한 디지털 돌봄서비스



스마트 플러그 사업

4. 뉴노멀 시대 마을교육 “사회적경제 기능” 강화 "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교육 환경]

- 대면방식의 사업 및 학교-마을 연계사업 추진 어려움
-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학습격차 심화
-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학습의욕 저하 및 우울감 증가



[2020. 6. 23. 생각마당 포럼]

양천형 Y-MOOC 혁신교육



4. 뉴노멀 시대 마을교육 “사회적경제 기능” 강화 "



온라인 교육 콘텐츠

초등 새내기를 위한 학교 소개영상 '나 혼자 간다'

정서함양 기회제공

청소년 온라인 고민상담 콘텐츠 '집에서 안녕들 한가요?'

해우리쌤 1:1 멘토링



-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해 양성된 경력단절여성과 문예체 협력강사와 취약계층 학생 멘토링
- 예체능 교육과 정서적 교류, 소통기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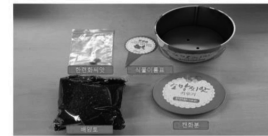
4. 뉴노멀 시대 마을교육 “사회적경제 기능” 강화”

- **대면과 비대면이 공존하는 블렌디드 혁신 교육**

온라인 학습키트 제공 (정보전달 위주의 온라인 교육한계 보완)

- 미래교육 : lot 로봇, AI 자율주행자동차 등 메이커 키트
- 스쿨 팜 : Home Farm 키트
- 진로수업 : 직업체험키트(목공예가, 원예전문가, 소잉아티스트)

홈팜키트 구성품



- **미래교육센터 상상스튜디오, 영상 제작장소로 제공**

마을강사의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거버넌스 회의 및 분야별 워크숍 온라인 시행 지원

- **양천혁신이야기 온(溫)라인 네트워크 확대**

홍보와 참여의 속도 제고 / 거버넌스 참여 확대 / 공동체 연계성 강화

5. 디지털 사회적경제의 일자리창출

- ✓ **취창업 전문 사회적기업 육성**

- 취약계층의 고용을 통한 취창업 역량강화
- 저강도 노동/ 고강도 교육 O.J.T 개발

- ✓ **디지털 역량의 강화와 활용**

- 정보소외계층의 디지털 역량 격차 해소
- 고학력청년층의 디지털 역량 적극 활용

- ✓ **사회적경제 디지털포용 실현**

- 포스트코로나, 4차산업, 기본소득시대 고용변화 대응
- 디지털 포용*일*교육*취창업 융합형 조직모델 개발



‘소외없는 디지털 세상’ 밑그림 확정

정보통신전략위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 의결
 “취약계층 정보활용 역량 제고는 물론
 의료·기업활동·일자리 등 디지털 환경 전반 정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사회적 경제

패널토론

성공적인 한국판 뉴딜을 위한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입법과제

김혜원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토 론 문

김혜원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우리나라 법인 조직은 영리성을 기준으로 100% 영리를 추구하는 상법상 회사와 100% 비영리를 원리로 하는 비영리조직으로 구분되며 상법상 회사이면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거나 비영리법인이면서 수익활동을 활발히 추구하는 하이브리드 조직을 법적으로 승인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최근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에서도 조합원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반협동조합과 공익을 추구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사이에 조합원의 이익과 공익을 동시에 고려하는 하이브리드 협동조합을 법인격으로서 보장하고 있지 않다.

전세계적으로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하이브리드 형 조직이 늘어나고 그 활동이 가시화되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이러한 하이브리드 조직에 대한 법제화 움직임이 활발하며 특히 상법상 회사이면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격을 부여하는 노력이 지난 20여년간 눈에 띄게 증가했다. 협동조합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몇몇 나라에서는 비분할적립금 제도를 통해서 조합원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하이브리드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보장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비분할적립금에 유입되는 잉여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여 공익을 추구하는 협동조합의 성장을 지원해오고 있다. 또한 영국 등에서는 상법상 회사에 기반하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격을 신설하여 하이브리드 조직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상법상 회사에 대해 별도의 법인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일반협동조합의 경우에도 세법상 완전한 영리조직으로 간주하고 있고 정관을 통해 공익 활동을 병행하려는 협동조합에 대해 하이브리드적 지위를 법적으로 부여하고 있지 않다.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을 통해 비분할적립금의 법적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상법상 회사를 위한 법인격이 필요하다. 본 토론문에서는 후자에 대해 상술한다.

상법상 회사를 기반으로 하여 그 설립절차는 신속하고 용이하게 하고 기본적인 운영구조에 있어서는 상법의 규정을 준용하게 하되 상호에 가칭 ‘사회적목적회사 (social purpose company)’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사회적 가치 추구 등의 특수한

조건들을 충족시켜야만 그 설립 및 존속을 가능하게 하는 등 외부적으로 여타 상법상 회사와는 구분되는 성격을 명확하게 하는 방식의 법인격 신설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적기업을 위한 새로운 법인격을 신설하려는 취지는 현재 사회적기업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불명확성, 외부 투자의 유인, 정책의 일관성 및 편의성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데 첫째, 상법에 기존 5종의 회사 외 새로운 회사 유형을 신설하는 방안 둘째, 사회적기업육성법에 특수법인으로 새로운 법인격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 셋째, 새로운 법인격을 규정하는 개별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사회적 경제의 발전은 법률의 개정이나 제도의 신설이나 개선만으로 담보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이 실질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도록 제고되는 것과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시민 및 시민조직의 연대와 협력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는 것이 동반되어야 한다. 사회적 경제 스스로 실력을 보여주고 노력을 배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과제를 몇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적경제기업들 스스로 내부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연대와 협력을 지원하는 자조기금을 키워낼 필요가 있다. 자조기금은 유사한 지향과 위험을 가진 이들이 자금을 모아서 긴급히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는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일반 금융기관들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실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재무구조나 자금 운용의 특이성을 오해하여 불확실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높은 금리를 부과하거나 지나친 담보를 요구하지만 자조기금은 정보의 불확실성 수준을 낮추어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조금 더 나은 경영 상태를 보여주는 기업들이 연대의 손길을 내밀어서 지금 뒤쳐진 기업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부문 내의 협력 수준을 제고할 수 있다. 외부의 자금 지원에 기대기 앞서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서로에게 힘을 되어주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둘째, 시장을 통해 보상받는 경제적 가치만이 아니라 시장을 통해 보상되기 어려운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활동이 지속가능성을 가지려면 사회적 가치를 알아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지지와 지원이 필요하다. 시민의 금전적인 후원과 기부도 중요하지만 무상의 노동력 지원 즉, 자원봉사도 중요하다. 자원봉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활동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그 가치를 몸으로 느낀다는 점에서 금전적인 기부에 비해 미래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훨씬 크다. 그런데 사회

적경제기업이 자원봉사를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자원봉사 시스템이 사회적경제기업에 우호적인 방식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점도 있지만 지금까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사회적 가치 활동에 시민의 참여와 자원봉사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체계적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된다.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각 기업들 내에서 좀 더 활발해져야할 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자원봉사를 체계적으로 조직화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출현을 기대한다.

코로나 위기는 기존의 사회 문제를 증폭시키기도 하고 새로운 사회문제를 낳기도 한다. 사회 문제는 사회적경제기업이 해결해주길 기다리고 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더 많은 사회적기업가, 더 많은 사회적경제기업, 더 많은 사회적 가치 창출이 등장하길 우리 사회는 기다리고 있다. 법률적 개선과 함께 사회적경제기업 스스로의 노력과 선한 시민의 지지가 어우러질 때 코로나 위기는 사회적 경제의 새로운 성장 시대를 여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사회적 경제

패널토론

한국판 뉴딜이 추진된 후
우리 사회에 남겨질 것에 대하여

하 재 찬

한국 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

한국판 뉴딜이 추진된 후 우리 사회에 남겨질 것에 대하여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

□ Prolog

한국판 뉴딜(K뉴딜), Social뉴딜 이어야 한다.

미국의 뉴딜은 자유방임주의 종식, 독점자본주의 시정, 복지제도 토대 마련이란 미국사회의 핵심 가치와 사회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왔다.

한국판 뉴딜은 우리 사회 어떤 가치와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어떤 사회적자본을 남길 것인가?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소개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위해 활동하던 32개 단체가 중심이 되어 전국 사회적 경제 주체들을 아우르는 연대체로 2012년 창립함.
- 전국 단위 7대 생협연합회, 4대 (사회적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부문 전 협회의회, 신협, 연구 및 중간지원기관 등 63개의 전국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음.
- 상호 연대와 협력, 역량강화 등 전국활동가 대회 등 내부 활동은 물론이고,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 시민행동 등 (대선/총선/지방)선거 대응 등 제도 생태계구축 활동과 다양한 토론회와 세미나 연구 등을 통하여 정책 활동을 해 오고 있음.
- 코로나19 사태때 ‘사회적 경제 코로나19 대응본부’를 구성하여 활동함.
 - 고용조정 0% 선언 활동을 통하여 250여 개의 사회적 경제 기업이 참여하여 사회적 경제가 사람중심 경제임을 증명하였고,
 - 자체적인 모금활동인 함께살림펀딩을 통하여 6억원을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경제기업 400여개 기업 임대료로 지원하였음(지원받은 기업들이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고 있음).

- 생활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자활기업/협동조합의 판로지원을 위해 ‘사회적 경제 상생마켓’ 운영 중(현재, 약 7억여원의 매출과 6개 기업의 입점 지원 중)
- 현재 사단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

□ 대전환 사회로의 전환을 인정하며, 뉴딜에 부푼 기대감.

- 저성장·양극화 심화 등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것으로 인식됨.
- 문재인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에 대한 체감도 부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판 뉴딜은 기대감을 갖게함.
- 디지털뉴딜로 제한되었던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지시로 ‘그린뉴딜’이 추가되었고, 사람중심 포용국가 기반 위에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정책 방향 또한 기대감을 갖게 함.

□ 한국판 뉴딜, 드러난 비전 속 핵심성과를 생각하니 바람빠진 기대감.

- 미국의 뉴딜은 자유방임주의 종식, 독점자본주의 시정, 복지제도 토대 마련이란 미국사회의 핵심가치와 사회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왔음.
- 한국판 뉴딜은 우리 사회 어떤 가치와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모토 ‘버티기’, ‘일어서기’, ‘개혁’과 비전 ‘선도형 경제’, ‘저탄소 경제’, ‘포용 사회’, 그리고 10대 과제와 추진계획에서 변화를 느껴기는 어려웠음.
- 제조업과 서비스란 그릇에서 디지털·그린이란 그릇이 바뀌었을 뿐, 그 그릇을 만든 재료와 그릇을 사용하는 방법의 변화는 없어 보임. 즉 기존의 대자본이 디지털·그린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임.
단 전국민고용보험 및 탄소중립 기반 마련 등 긍정적 성과 또한 존재할 것임.
- 디지털뉴딜의 경우 넷아키¹⁾ 자본(netarchical capital)이 작동하여 그 안에서 발생하는 가치를 뽑아가거나 잉여가치를 지배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음. 그린 뉴딜도 같은 문제의식이 있음.

1)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유무형의 사회적 인간적 자연적 자원들을 위계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말한다. 구글, 아마존 등 대자본이 만들어낸 플랫폼이 무수히 많은 인적 물적 무형적 자원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연상할 수 있다.

- 대전환이라 할 때
 - 소득불평등과 기후위기를 가져온 자본주의경제 시스템에 대한 전환(또는 시정)
 - 국민을 소비자로 전락시켰고, 노동상품화 했던 경제구조의 변화,
 - 대자본 중심으로 국민을 수동적 (정책)소비자·수혜자로 전락시켰던 것을 시민자본이 중요하게 작동하여 시민(사회) 활성화,
 - 뉴딜을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이 촉진되거나 기반을 공고히 마련하는 기여.

이와 같은 변화나 시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 사료됨. 그러나 예상되지 않음.
- 더욱이 한국판 뉴딜을 통해 새로워질 대한민국 사회의 핵심파트너가 누가인가?
-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사회를 견인하면서도 중심에서 역할을 할 주체임.
- 이런면에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 카운터파트너가 중요함. 지역균형발전 그 카운터파트너는 누구이며,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는 관객이 아니라 뉴딜이란 무대에 참여하는 중요한 파트너이어야 함.

□ 한국판 뉴딜의 방향성: S뉴딜이어야...

- 민주적 시민성은 K방역 성공의 핵심 요인²⁾임(물론 정부의 긍정적인 노력 또한 함께 했기 때문일 것임.)
- 앞으로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것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준 것이라 판단됨.
- 한국판 뉴딜이 ‘민주적 시민성’을 확대하고 활성화할 수 있어야 함.
 - 시민자본이 작동하도록 하고,
 - (에너지)소비자에서 (에너지)시민이 되어 국민이 뉴딜에 참여하도록 해야 하고,
 - 소득불균형 극복에 정부와 함께 당사자도 동업자가 되어야 하고,
 - 시민자본과 시민이 활동하는 무대는 지역이어야 함.
- 한국판 뉴딜이 남겨야 할 핵심성과는 사회적 자본이어야 함.
 - 각자도생(各自圖生)에서 호혜상행(互惠相生)의 사회가 되도록 하는 신뢰 자본이어야 하고,

2) 시사인(2020.06.02.) 코로나19가 드러낸 ‘한국인의 세계’-의외의 응답 편

- 기후위기로 몰아넣는 경제활동이 아닌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이어야 하고,
 - 우리 사회에서 그 동안 작동했던 사회적자본이 새로운 사회를 위해 움직이고 역할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그 동안 사회적 경제는
- 협동조합을 통해, 그리고 사회적기업과 자활기업 등을 통해 시민이 자주적으로 참여하여 그릇이 되어 왔고,
 - 지역에서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 주민 간 신뢰를 쌓아 공동체를 회복해 왔고,
 - 의료사회적협동조합과 돌봄 사회적기업을 통해 지역기반 안전망을 만들어 왔을 뿐만 아니라 주민을 의료·돌봄 소비자가 아닌 주체인 시민으로 육성했으며,
 - 재활용, 로컬푸드 등 자원순환과 지역순환 시스템을 만들어 왔고,
 -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을 통해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으며,
 - 생활협동조합, 공동육아,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을 통하여 자신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넘어 이웃의 문제도 해결하며 상생해 왔음.
-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에서, 사람들이 떠나 공동화된 지역에서, 인구소멸 위기의 농촌에서 이렇게 사회적 경제는 많은 사회적자본을 구축해 왔음.
- 한국판뉴딜에서 제시한 새로운 사회를 위해 이미 준비하여 형성한 이 자본과 주체들이 보다 더 활발하게 작동하도록 해야 함.

□ 한국판 뉴딜이 만드는 일자리는 지역(생활권)과 협동을 기반으로 해야...

-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활동이 가능하도록 기업활동의 범위에 따라 보다 용이하고 유연하게 적용되는 법과 제도 개선 필요.
- ex1) 로컬푸드는 지역 내 생산과 유통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적용되는 법은 전국 유통 대기업에게 유리한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함.
- ex2) 화물유상운송 행위의 경우 설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운송이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적용을 받음. 화물차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필요하게 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은 차량을 구입하여 자신의 물건을 배송하는 형태로 법망을 피해가고 있음. 즉 지역 내 다양한 규모의 운송/유통/배송 등 관련업을 하는데 법이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일자리 창출 방식이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한국판 뉴딜 다워야 함.

- 디지털/플랫폼 시스템에서 이미 위험이 확인된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며 사회안전망이 강화되어야 함.
- 개인 (사회적)기업가를 육성하여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했던 것에서 협동(공동체)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방식이어야 함.

ex) (가칭)사회적 일자리 season 2: 동작구 도시마을기술네트워크, 성대골(에너지자립 마을) 등 마을이나 공동체 단위의 사회적 경제 단지 육성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 Epilogue

한국판 뉴딜(K뉴딜), Social뉴딜 이어야 한다.

한국판 뉴딜이 민주적 시민성이 강화되도록 경제사회 체계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대전환다워야 한다.

한국판 뉴딜은 시민자산, 사회적 자본을 활성화하고 남겨야 한다. 이미 존재하는 이러한 자산과 자본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 등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관여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고, 새로운 시민자산과 사회적 자본이 남겨지도록 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사회적 경제

패널토론

지역주도 생태전환을 위한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적 경제의
전략을 준비할 때입니다.

변형석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지역주도 생태전환을 위한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적 경제의 전략을 준비할 때입니다.

변형석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7월 14일, 21세기 한국사회 대전환을 기획하는 야심 찬 전략으로서 <한국판 뉴딜>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복합하고 여기에 고용을 중심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애초 디지털 뉴딜만이 언급되었던 정부 방향이 크게 보완됨으로써, 디지털 뉴딜이라는 다소 추상적이었던 뉴딜 아젠다가 한국사회의 전환을 논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된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는 지난 10년여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왔으며, 비록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미약하나, 향후 한국사회의 대전환 과정에서 공정한 경제, 지속가능한 경제, 지역 경제 활성화, 에너지 전환, 건강한 일자리 창출 등의 과제를 수행할 중요한 민간 파트너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한국판 뉴딜>의 어디에도 사회적 경제는 언급되지 않고 있으며, 그 변화의 방향성이 정확히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도구적으로도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경제가 아직 한국사회에 정착하지 못하였고, 기존 경제질서의 대안으로 이해되고 있지 못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서, 사회적 경제 활동가의 한사람으로서 뼈아픈 자기 성찰과 함께 아래와 같은 과제를 덧붙인다.

1. 사회적 경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사회적 경제비서관을 신설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기반으로 꼽히는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제정은 3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윤호중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다시 발의하였고, 21대 국회의 여야 의원 구성과 상임위 구성으로 볼 때 법안의 제정 가

능성은 높아보이나 방심할 일은 아니다. 특히 <사회적 가치 기본법>이나 <판로 촉진법> 등 3개의 법안이 함께 제정되어야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반기 중 조속히 3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여당의 집중적 노력과 야당에 대한 설득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기왕에 제정되는 법안의 상세 내용과 관련하여서도 사회적 경제 민간과의 긴밀한 숙의를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법안이 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야 한다.

2. <한국판 뉴딜>과 사회적 경제의 역할에 관한 전략 수립

유럽의 에너지 전환 과정은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와의 밀접한 연관성을 빼고 설명할 수 없다. 협동조합형 개발은 지역사회의 여론을 우호적으로 조성하고, 님비현상을 제어하며, 농어민을 포함한 개인들의 참여를 통해 에너지의 민주화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도 에너지 전환 뿐만 아니라 자원의 재생, 자원의 효율적 이용, 친환경적 소재의 개발, 친환경 농업과 나무 식재에 이르기까지 <그린 뉴딜>이 지향하는 바 사회적 가치의 최전선에서 혁신을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으나 현재 <한국판 뉴딜>의 계획안에 사회적 경제의 역할은 찾아볼 수 없다. 이는 <한국판 뉴딜>이 아직 기초계획으로서 상세한 사업전략을 담고 있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 정부도, 또 사회적 경제 민간 진영도 아직 <그린 뉴딜> 혹은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깊은 고민이 부족함을 부인할 수 없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안전망 확보 등의 이슈에서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 지자체, 국회, 민간 등이 지혜를 모으고 빠르게 전략을 수립하여 <뉴딜>이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야 한다. 사회적 경제의 방식은 한국사회 대전환의 여러 요소 중 시민의 참여를 통한 사회의 변화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서 그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3.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판 뉴딜>과 ‘지역’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

코로나는 인간이 가속화시킨 기후변화의 결과로서, 인류사회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최초/최대의 환경적 재앙이다.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의 한국사회는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전세계적 노력을 집중해야하는

동시에, 점점 더 자주 들이닥칠 수밖에 없는 팬데믹에 시스템적인 준비를 해야한다. <비대면>이라는 수식어를 팬데믹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처럼 사용하고 있으나, 팬데믹에 항거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지역”에 있다. 지역을 회복하는 일에 있다. 지역사회는 팬데믹 상황에서의 훌륭한 돌봄 안전망의 기본 단위라는 측면에서, 또 순환경제 시스템을 통해 유연하게 국제적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지역 순환적 농업을 통해 식재료를 생산하고, 상호 보완적 돌봄과 교육 서비스를 집약 연계하고, 다양한 프로슈머 개인들을 통해 물품을 공급하고, 지역사회 기반 공유경제로 효과적으로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 자산화된 사회주택과 협동조합 기반 의료서비스를 소유함으로써 지역은 최악의 경우 지역이 붕괴되더라도 건강하게 버틸 수 있는 독립적 힘을 얻게 된다. 이는 생활의 지속성 측면 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속성에 있어서도 팬데믹 시대의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는바, <한국판 뉴딜>의 성과는 최종적으로 사람과 특히 “지역”에 축적될 수 있도록 기획되어야 한다. 이는 실행과정에 있어서의 섬세한 접근과 사회적 경제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수반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역시 <한국판 뉴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이유다.

<끝>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사회적 경제

패널토론

성공적인 한국판 뉴딜을 위한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입법과제

박 광 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성공적인 한국판 뉴딜을 위한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입법과제

박 광 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판 뉴딜의 성격]

- 한국판 뉴딜은 휴먼 뉴딜(Human New Deal), 즉 확고한 사람 중심 포용국가 기반 위에 그린 뉴딜(Green New Deal), 디지털 뉴딜(Digital New Deal)의 추진 체계를 구성하여 우리나라의 사회 및 경제를 새롭게 변화시키겠다는 약속임.
- 한국판 뉴딜은 단순한 정책적 프레임이나 구호가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재정, 환경 등의 전방위적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개념 및 실천체계임.

[한국판 뉴딜과 사회적 가치]

- 한국판 뉴딜을 사회 및 경제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약속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약속이 어떠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에서는 사회적 가치는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서 13가지(①인권, ②안전, ③건강, ④노동, ⑤사회적 약자, ⑥기업 상생, ⑦일자리, ⑧지역사회, ⑨지역경제, ⑩기업 사회적 책임, ⑪환경, ⑫참여, ⑬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 정도의 내용을 제시함.¹⁾
- 한국판 뉴딜의 비전은 선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도약>임.

1) 박광동/이철선, “「사회적 가치법」과 「집합건물법」의 관계에 관한 연구”, 「집합건물법학」 제33집, 한국 집합건물법학회, 2020, 56면.

- 한국판 뉴딜의 비전은 크게 선도형 경제, 친환경(저탄소), 포용 사회(안전망 강화)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상의 사회적 가치 중 경제는 ⑥기업 상생, ⑦일자리, ⑨지역경제, ⑩기업 사회적 책임과 관련이 있고, 친환경(저탄소)은 ⑪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이, 포용 사회(안전망 강화)는 ②안전, ③건강, ④노동, ⑤사회적 약자와 관련이 깊음.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은 공공기관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민간영역까지 확대시키기 위한 것이므로,²⁾ 공공성과 보편성을 지향하는 한국판 뉴딜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상의 사회적 가치가 복합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한국판 뉴딜 추진 중에 뉴딜 기본법 또는 개별법 단위의 한국형 뉴딜 법제화 등 다양한 입법화 방안이 제시될 수 있으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상의 사회적 가치가 한국판 뉴딜 정책의 방향 제시, 제도 및 정책의 체계화·종합화에 영향을 미칠 것임.

[한국판 뉴딜과 사회적 경제]

-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에 의한 극심한 경기침체 극복 및 구조적 대전환의 대응을 위해 제기된 것으로, 경제와 깊은 관련이 있음.
-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다양한 법제적·제도적 시도가 진행되고 있음.
- 사회적 경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으나, 현행 국회에 계류중이거나 폐기된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 상의 사회적 경제의 개념을 분석하여 보면 사회적 경제는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의미하는 것임.

2) (2100001)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박광온의원 등 16인), 2020.6.1.

-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은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등을 의미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은 사회적경제조직이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의미함.³⁾
-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에 의한 단순히 경기침체 극복만을 위한 경제정책이 아님.
- 한국판 뉴딜은 휴먼뉴딜(사람중심 포용국가 기반의 안전망 강화)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기술, 융복합·혁신에 의한 디지털 뉴딜 및 그린 뉴딜이 경제의 축진에 중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경제발전 경제정책이 아닌 공공성과 보편성을 지향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사람 중심 포용국가를 추구하는 것임.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사회적 경제는 단순히 경제적 발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람 중심 포용국가를 추구하는 한국판 뉴딜과 그 방향성에서 궤를 같이 하는 것임.
- 한국판 뉴딜이 공공성과 보편성을 지향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사람중심 포용국가를 추구할 때, 그 목적을 같이 하는 다양한 주체들(사회적 경제 조직)의 참여가 요청됨.
- 한국판 뉴딜에 대한 추진과제⁴⁾ 수행시 사회적 경제 조직이 한국판 뉴딜 정책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의 장의 확대가 필요함.
 - 사회적 경제 조직이 한국판 뉴딜에 대한 추진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그 이익을 지역공동체 발전과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한국판 뉴딜의 성과가 선순환 구조로 파급되어, 결국 사람 중심 포용국가에 기여하게 될 것임.

3) (2101880)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윤호중의원 등 15인), 2020.7.14.

4) ① 디지털 뉴딜: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② 디지털.그린 융복합: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③ 그린 뉴딜: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 추후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시 사회적 경제 발전 기본계획 및 사회적 경제발전위원회의 중요 사항에 대한 심의·조정 사항이 한국판 뉴딜 정책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 법제시에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경제는 한국판 뉴딜이 지역공동체로 확대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되므로 사회적 경제 조직을 활용한 한국판 뉴딜의 지역공동체로의 확대 방안에 대한 정밀한 거버넌스 검토 및 법적 근거 마련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와 해외 국가의 사회적 경제조직간의 협력체계를 활용한다면 한국판 뉴딜의 해외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임.
 - 한국판 뉴딜 추진을 해외로 확대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주체가 해외로 사업 진출 또는 확장시 발생하는 초기 네트워크 관련 리스크가 발생하는데,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 조직이 해외의 사회적 경제 조직과의 연계(ODA 등)를 통한 한국판 뉴딜 시장 구축 등을 한다면,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면서 효과적인 해외 진출이 가능함.
 - 이러한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 조직이 해외의 사회적 경제 조직과의 연계(ODA 등)를 통한 한국판 뉴딜 시장 구축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제적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한국판 뉴딜 정책의 평가와 관련하여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사회적 성과지표를 사용한다면 실효성 있는 평가에 기여할 것임.
- 한국판 뉴딜 정책의 평가와 관련하여 사회적 가치의 평가지표를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새로운 평가지표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국판 뉴딜 정책이 방향성 설정에 사회적 가치를 검토하여야 하는 것은 타당하나, 구체적 정책의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사회적 가치 실천 및 기여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화된 평가지표(사회적 성과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한국판 뉴딜과 입법 모형 구축]

- 한국판 뉴딜 추진과 관련하여 다양한 법제 개선이 필요함.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과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 의 관계 설정에 따라 한국판 뉴딜 관련 법제화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발생하게 됨.
 - 양자를 차원이 다른 독립된 기본법으로 보는 경우에, 한국판 뉴딜 관련 법제화시에 법제화의 목표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상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야 하고, 별도의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 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다양한 입법 모형의 고려가 필요함.
 -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 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상의 사회적 가치 규범의 하나의 범주 내지 내용(구현 방식)으로 이해하는 경우에는, 한국판 뉴딜 관련 법제화시에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 과의 관계 설정시에 대한 입법 구축시에 사회적 가치가 같이 고려되는 것임.
 - 한국판 뉴딜 추진과 관련하여 그린 뉴딜 및 디지털 뉴딜과 관련하여 관련 법률의 분법화 및 기본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가능함.
 - 한국판 뉴딜 추진은 집행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기본법의 형태 보다는 개별법 형태로 법률의 분법화 또는 통법화, 개별법률의 일부 개정 등이 타당함.
 - 한국판 뉴딜에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 상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적극적으로 한국판 뉴딜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예컨대 한국판 뉴딜 관련 법제화시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 상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 수행 주체로서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및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 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긴밀한 협력 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사회적 경제

패널토론

성공적인 한국판 뉴딜을 위한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입법과제

조 현 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장

성공적인 한국판 뉴딜을 위한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입법과제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장

■ [디지털 뉴딜 분야] 사회적 경제 생태계 및 비즈니스 모델 혁신

○ (제안1) 사회적 경제를 중심으로 공공 물류·유통 시스템 구상

- 민간시장은 온라인 쇼핑·배달 서비스가 오프라인 소비를 대체하고 있음. 하지만, 소비재를 제공하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온라인 물류·유통 시스템은 미비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
- 공공시장을 지원하는 물류·유통 시스템 대부분 기존의 민간시장의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는 형편.
- 생협 등의 유통·물류 경험을 기반으로 사회적 경제 전반의 물류·유통 시스템 전반을 재구축하는 작업 모색 필요. ※공공배달앱

○ (제안2) 의료 취약지역 주민 대상 비대면·대면 복합의료를 제공하는 의료 사형(마을주치의) 모델 통한 공공의료 강화

-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스마트 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비대면 의료서비스 기반 구축’ 비전이 제시되었음. 비대면 의료에서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 편의 제고를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것. 2022년까지 총사업비 1000억원, 2025년까지 2000억원을 투자해 1000개에서 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
- 하지만, ‘디지털 뉴딜’이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하지만, 일자리가 줄어들고, 양극화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음. 디지털 뉴딜과 사회적 경제 분야와의 결합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음. 특히, 디지털 뉴딜을 사회적 경제 분야의 의료·돌봄 체계와 결합시켜 격차를 줄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
- 기존 의료계에서도 상급병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 비대면 상황에서 환자가 자신의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기 어렵고, 진단과 처방을 위한 정보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반면, 해당 환자의 기존이력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마을주치의’의 경우,

비대면 진단과 처방의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유력한 의로서비스 제공 방법일 수 있음.

- 지역사회에 밀착하고 지역주민들과의 1:1 관계를 바탕으로 건강의 관계망을 구축해나가는 의료사협에 적합한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제공해 ‘비대면·대면 복합 의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물적·제도적 기반 제공 필요

■ [그린 뉴딜 분야]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사회적 경제 분야와 범사회적인 집합적 임팩트(Collective Impact) 모델 개발

○ (제안1) 사회적 경제 분야와 협업하는 SIB(Social Impact Bond, 사회적 과보상사업) 추진

- 현재 정부가 제시한 종합계획 중엔 ‘그린 리모델링’과 ‘그린 에너지’ 분야를 사회적 경제 분야와 협업할 수 있는 대표분야로 꼽을 수 있음. 정부에서 제시한 대로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사업을 모델로 접근할 때, 사회적 경제의 실천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정부의 안은 탄소배출 저감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채, 대기업 중심의 기술적 접근 방식이 부각되어 보임. 환경보호나 생명살림, 자원순환, 대안에너지 등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고민하는 의제나 방법론들은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음.
- 사회적 경제 분야와 협업해 정부 차원의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SIB 사업 추진 검토 요망

■ [사회안전망 분야] 플랫폼·프리랜서 분야 사회안전망 강화를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

○ (제안1) 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를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

- 플랫폼 사업 대부분 초기 진입단계를 넘어 네트워크 효과를 구축한 이후엔, 중간 마진을 높이거나 투자유치나 M&A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강함. 사회적 경제에서 플랫폼을 자체 개발·운영하게 될 경우,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종사자들과 공유할 수 있음.
- 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해 고용과 복지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육성·지지하고, 규모화 등 기업으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뒷받침 필요. 고용안전망(일자리와 서비스 거래 지원, 직업훈련, 부당노동행위 등으로부터의 종사자 보호) 및 사회안전망(종사상

지위의 부여, 내부공제, 자조모임 등을 통한 사회적 지지망 구축)으로서의 역할, 사회보장 전달체계(플랫폼 사회적경제기업을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사회보험 적용 창구로 활용)로서의 역할 수행 가능

- 구체적으로는 국내 공공 고용지원서비스에서 배제된 플랫폼 종사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과 산업안전 노력 등 근로복지를 제공할 수 있으며, 개별 노동의 고립감과 소외를 경감시키고 종사자의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모임이나 회의 등 커뮤니티 활동을 촉진하는 등 일반 플랫폼 기업들이 하지 못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 또한 집단적 노사관계나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 이용자(혹은 중개업체)와의 1:1 거래관계이기 때문에 당하기 쉬운 부당행위에 대해 종사자를 대변하거나 고충을 상담하기도 하며, 특히, 사회보험에서 배제된 종사자들을 위한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한국IT개발자협동조합에서 시도하고 있는 플랫폼은 중간착취가 심하고 일거리 중개의 불안정성이 큰 IT 개발 업계에서 중간 마진을 최소화하고 투명한 운영 방식의 새로운 일거리 연계 모델을 구현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이러한 접근을 통해 높은 수수료와 부족한 서비스, 사후 관리 등 기존 IT 인력파견업체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음.
- 더불어 계약, 경력 형성 등의 과정에서 IT 개발자들을 보호할 수도 있음. 조합이 발주처와 계약을 맺고, 서비스 제공에서 사후관리까지 책임짐으로써 공정한 계약을 촉진할 수 있음. 나아가 개인으로는 참여하기 어려운 대규모 용역에 참여함으로써 개인 개발자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프로젝트 참여 기회가 적은 신입 개발자들도 선임 개발자들과 팀을 형성에 참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력 형성과 기술 습득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음.
- 하지만, 플랫폼 사업에서 전문 인력의 영입과 시스템 구축과 마케팅 등 창업기에 대규모의 자금 조달이 핵심. 손익분기점에 이르기까지 인내자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있는 상황.

■ [입법 전·후 과제] 사회적 경제가 제도정치로 공식화되기 직전...지금은 ‘사회적 경제’ 의미와 범주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할 때

- ‘사회적 경제’의 의미와 범주는 단순히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의 집합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의 핵심원리를 따르는 모든 자발적 결사체를 포함해야 함. 제도의 규정성을 넘어, 다양한 ‘연대’와 ‘협력’을 포괄할 수 있으며, 시민의 참여와 책임을 근간으로 하는 시민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

- ‘경쟁 논리’가 지배하고, ‘승자독식’으로 양극화를 가속화시키는 자본주의로부터 공생과 호혜, 협동의 가치체계로 바꾸는 사상이자,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활동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 제도화된 몇몇 경제조직으로 이해되기보다는 ‘사회’의 원리로 ‘경제’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사상이자 실천 활동으로 인식될 필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사회적 경제

패널토론

전환적 뉴딜과 사회적 금융

장 지 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경영기획실장

전환적 뉴딜과 사회적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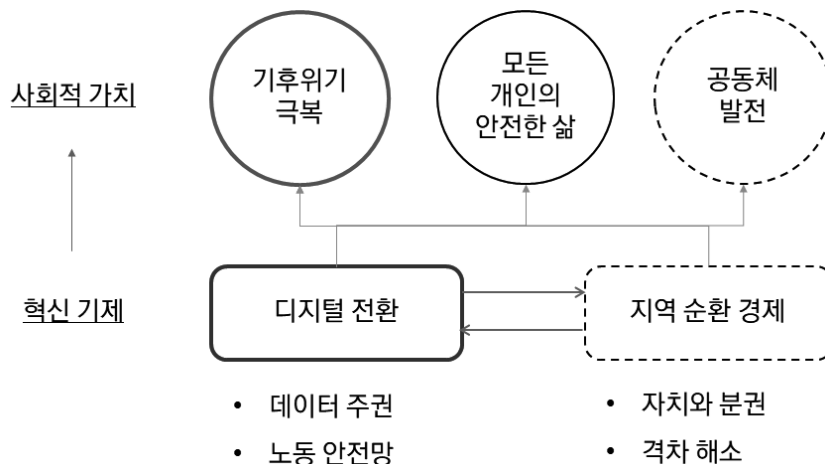
장 지 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경영기획실장

□ 한국판 뉴딜과 사회적 가치

- 코로나 직전, 우리 사회의 큰 화두는 기후위기 (청소년, 기후를 위한 학교파업 시위), 플랫폼경제 확산으로 인한 경제주체 간 갈등 (타다-택시업계 갈등), 멈추어지지 않는 산업재해 (김용균 사망사고) 등이었음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정부가 위기극복을 위한 의지로 이런 화두를 포괄적으로 배열한 것으로서, 전반적으로 일자리와 공동체의 위기를 새로운 산업적 활기를 통해 극복하려는 접근으로 보임
- 한편,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주목을 받은 「사회적 가치 기본법」은 제안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음

“최근 코로나19가 불러온 위기는 우리사회 구조와 제도 전반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고, 이윤과 효율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대전환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음.”
- 사람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 등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관점에서 한국판 뉴딜에 접근하는 것을 ‘전환적 뉴딜’이라 칭한다면, 이 전환적 뉴딜은 아이템의 문제가 아니라 접근 방식과 우선순위의 문제로 귀결
 - 우선순위는 가치의 개입을 전제하는데, 가치가 개입되면 배열된 아이템 가운데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수단인지 말할 수 있게 됨



□ 혁신 기제에 대한 성찰적 접근

- 디지털 전환, 에너지 혁명 등 기술 발전과 연관된 혁신 기제는 상업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측면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만나게 됨
- 디지털 전환 - 데이터 주권 정립, 노동 안전망에 대한 사회적 합의
 - 2000년대 중반 O'Reilly 등 IT 분야 미디어들이 만들어 낸 웹 2.0 담론은, '연결'된 '개인'의 '참여'와 '협력'으로 가치를 만들어 내는 '개방적' 플랫폼이라는 비전을 기술·사회·산업 영역에 동시에 제시함
 - * 1인 미디어, 소셜네트워크 등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
 - '빅데이터 기반 예측 서비스(인공지능)'로 특징되는 현재의 디지털 전환 흐름은 새로운 사회적 비전은 거의 논의되지 않은 채 기술과 산업적 측면의 논의로 흐르는 경향
 - * WWW의 창시자 팀 버너스리는 공공선을 위한 도구로서 웹의 미래를 우려하며 "개인들이 자신의 데이터 사용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공개하는 등 활동 이어감
 - 성찰없이 진행되는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은 경제주체 간 격차를 더욱 확대하고, 경제력 집중을 가속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 에너지 전환 - 최근접 결정의 원칙, 지역사회 기반 추진
 - 환경문제는 현장의 사람들이 가장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도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
 - 탈원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온 독일은, 정책 초기에 시민참여 기반 에너지 프로젝트가 활성화되었고, 많은 프로젝트가 지역사회 기반 협동조합 법인격으로 조직되었음
 - 환경 분야는 지역 분산형 모델 구축, 참여 주체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한 문제해결 도모 등 사회적경제 운영원리가 적합

□ 한국판 뉴딜 - 사회적 경제 접근 방법

- 사회적 경제 조직은 “시민들이 공동체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해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경제적 결사체”
-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역의 사회적 경제 관련 네트워크와 협력해 분야별 일정 비율을 사회적 경제 방식에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
 - * 서울시, 신설 국공립 어린이집의 10%를 지역의 여성협동조합에 맡긴다는 계획 발표 (2015년)
- 정책적으로 사회적 경제 영역에 할당하더라도, 상황에 맞는 금융 수단이 제공되지 않으면 실행이 어려움 → 사회적 금융의 역할 필요

□ 전환적 뉴딜과 사회적 금융

- ‘사회적 금융 기관’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과 프로젝트에 투융자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주 사업으로 하는 조직으로 금융과 관련한 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
 - * 2000년 이후 마이크로크레딧, 임팩트투자사, 자선벤처 재단, 공제조합 등 사회적 금융 기관들이 등장하고, SIB, P2P중개기관 등 새로운 모델에 기반한 주체들이 끊임없이 생겨남
 - * 2018년 정부의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기존의 간헐적·제한적 활동에서 벗어나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음
 - * 현재 30여 개 조직이 활동 중이고, 형태와 모델은 각기 다양함 (8월 중 사회적금융포럼 결성)
- 사회적 금융 기관들은 환경, 돌봄, 노동 등 분야별 목적에 적합한 기금을 조성하거나, 기 조성된 기금의 운용에 있어 기존 금융과는 다른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채택함으로써 임팩트 창출 가능
- 특히, 협동조합, 사단법인 등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격에 자금공급, 비수도권의 지역기업에 대한 투융자에 적극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상에 적합한 자금공급 방식과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사회적 금융 활성화 정책 3대 전략 · 5대 과제

추진 전략

- 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전용기금 조성
- ② 기금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육성
- ③ 사회적 금융에 적합한 새로운 자금공급 방식 개발

과제 1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을 통한 사회적 금융 제도기반 마련

- ① 정부·지자체는 사회적 경제 금융기반 조성을 위해 사회적 경제 발전기금 설치
- ② 휴면예금과 복권기금을 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 ③ 사회적 경제 발전기금 운영은 민간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을 통해 수행

과제 2 민관협력으로 지역기금을 조성·운영하기 위해 「지방기금법」 개정

- ① 지자체 사회적 경제 기금의 민간위탁을 금지하는 「지방기금법」 개정
- ② 민간재원과 지자체 사회적 경제 기금을 배합해 운용할 수 있는 구조 허용

과제 3 휴면예금을 사회적 경제 금융지원에 활용하도록 「서민금융법」 개정

- ① 휴면예금 재원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원할 수 있게 「서민금융법」 개정
- ② 복권기금의 배분대상과 용도에 사회적 경제 발전기금 및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복권법」 개정

과제 4 「사회성과보상사업 관련법」 제정으로 민간 사회투자 활성화

- ① 공공기관의 사회성과보상사업 관련 법 제정을 통해 정부·지자체가 보상의 주체가 되어 민간이 선투자하는 사업을 설계·시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② 공공이 성과보상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성과보상기금 조성

과제 5 「신협법」 개정을 통한 금융협동조합의 사회적 금융 참여 촉진

- ① 신협이 사회적경제조직과 상호협력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 마련
- ② 협동조합의 자본조달 활성화를 위해 신협의 타 법인 출자 허용

-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회적 금융 정책요구안 (2020. 3, (준)사회적금융포럼)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